

‘방송광고산업 전문쫓’ 의결 보류

방통위 “형평성 문제… 이달 내 마무리”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내달 중 결정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에 대한 광고총량제 등을 논의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결 안건을 보류했다.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문위원회 구성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짓고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은 11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방통위 소속으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장려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 역할은 방통위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실무적 자문이나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안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은 총 8인으로 방송사업자 및 단체 추천으로 한국방송협회 2인, 유료방송사업자 및 한국케이블티브이협회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인으로 구성하고 방통위가 법률 및 광고 전문가 2인을 추천한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송광고 심의에 대한 논쟁과 대립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협회 2인과 케이블티브이협회 3인의 구성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도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토론은 중요하므로 비중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고 합의를 거부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의견수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 쪽의 처지를 반영한 판

단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는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으로 구성에서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한국방송협회와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자(PP) 사이의 대립”이라며 “그 외에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PP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한국방송협회 2인과 케이블티브이협회 3인이라고해서 한쪽으로 기울게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음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조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당장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 진행될 바에는 안 만드는 것이 낫다”고 반박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의견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통적인 방송사업자 외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주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직접 들어가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주 초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KISDI에서 광고총량제 영향에 대한 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 또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석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맡긴 뒤 11월 중에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의도했던 계획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기자 wjdn0227@

“지상파 광고총량제 내달 추진”

최 방통위원장, 이달 분석 결과 나올 것
산업활성화 전문위 구성 오늘 다시 논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내달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도 도입을 놓고 막바지 진통이 예상됐다.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PP)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가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광고총량제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달 내 효과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 결과 검토를 맡긴 뒤 내달 중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



사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는 전체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지 편향된 게 아니다”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를 포함,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자 간 의견 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류했다.

당초 방통위는 △방통위가 추천하는 광고·법률 전문가 2인 △지상파 방송이 추천하는 2인 △유료방송·케이블 방송 등이 추천하는 3인과 △위원장(방통위 추천) 등 8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고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파이낸셜
뉴스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19면 정보통신

방통위 “광고총량제 내달중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광고총량제를 다음 달 중 추진키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의 광고규제가 사실상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가뜰이나 광고시장 축소로 허덕이고 있는 국내 미디어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광고총량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

로 다음 주, 늦어도 10월 이내에는 효과 분석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 분석결과 검토를 맡긴 뒤 11월 중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협회 등은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이 허용되면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예산이 지상파방송의 수익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커지는 단통법 불만 오늘 긴급 대책회의

미래부·통신3사·제조사 모여
정부, 보조금 인상 권고 가능성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업체 CEO(최고경영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래부가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찬 회동에서 업계에 휴대폰 구매 지원금(보조금) 인상 등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신업계에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하며 KT는 해외 출장 중인 황창규 회장을 대신해 남규택 부사장이 참석한다. 휴대폰 제조사의 경우 삼성전자는 이상훈 사장이, LG전자는 박종석 사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국민의 통신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업체들이 휴대폰 지원금을 낮게 책정해 소비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은 지원금 규모가 작아서 휴대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인 만큼 지원금 상한선(최대 34만5000원) 내에서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거나, 통신요금 할인 폭을 넓히는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의 역할을 점검하고 단통법이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동훈 기자

한국경제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A16면 종합

비판여론에 급해진 미래부·방통위

오늘 통신·휴대폰 제조사 CEO 소집

보조금 확대 요구할 듯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창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인 KT에서는 남규택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 나온다. LG전자에서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사장), 삼성전자에서도 사장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행 보름 만에

법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단통법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단통법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달리 주는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통신업체와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줄이면 서 모든 사람이 비싸게 단말기를 사게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기업에 휴대폰 가격과 이용 요금을 낮출 것을 종용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휴대폰 가격과 통신 요금을 장관들이 나서 낮추라 마라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 taehun@hankyung.com

‘단통법’ 거센 반발... 정부, 이통·제조사와 회동

보조금 확대·출고가 인하 등 대책 논의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를 불러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통사의 보조금 확대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와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KT는 황창규 회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남규택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 대신 자리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사장)이, LG전자에서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사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중인 팬택에는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이통사와 제조사를 급히 호출한 것은 최근 단통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보조금 인상 등 추가 조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통사의 보조금 증액 종용과 통신요금 인하를,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3~14일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이 시기·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앨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단통법을 시행한 지 2주 만에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으며, 온라인에선 단통법 폐지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제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A13면 산업

약정할인 확대·최대 보조금 요금기준 인하

정부, 오늘 이통·제조사 CEO 긴급회동... 단통법 보완 논의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통신요금 약정요금할인을 확대하고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은 사라졌지만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고 요금할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

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 보완방안을 논의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과 관련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된 보조금 수준이 예상보다 낮고 이통3사의 요금혜택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보완대책을 논의해왔다”며 “간담회에서는 이런 대책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현재 1만~2만원 수준인 통털에블루션(LTE) 2년 약정 요금

할인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저율질하고 있다. 아울러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수준도 현행 9만원대에서 7만원대나 8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행 단통법 고시안에는 요금제에 비해 보조금을 지급하되 최고 수준의 보조금은 9만원(무약정 기준)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내지 제조사들의 장려금 인상을 통한 보조금 상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미래부 장관·방통위원장, 오늘 이통3사·제조사 CEO들과 긴급 회동

불만 활활 ‘단통법’ 진화대책 내놓을까

체감 구매가 상승·시장 냉각등 문제점 논의
당국 “소비자에 혜택가야”... 업계 대응 관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 K 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CEO (최고경영자)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제조사 CEO와 만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휴대폰 유통 시장 냉각, 소비자 체감 구매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정책당국 수장들과 사업자간 긴급회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3사 및 단말기제조사 CE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남창규 KT 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 양대 수장과 업계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 양대 부처 수장과 업계 대표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중간경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다양한 문제점들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저가요금제 가입자 현황

	9월 평균	10월 1일~14일 평균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	31%	48.20%
중고폰 가입자 비율	약 2900명 (4.2%)	약 5000명 (10.3%)

*저가요금제: 월 요금 2만5000원~4만5000원,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비자들의 단말기 체감 구매가격이 높아졌다는 불만이 팽배한 만큼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의 혜택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에 사업자들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시장에서만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순 없기 때문에 정부 요구를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통신서비스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단말기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요금인하만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단통법 시행 이후 10명 중 1명은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가량은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5~45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지난달 31%에서 법 시행 후 지난 14일까지 48.2%로 높아졌다. 고가 요금제 비율은 27.1%에서 9%로 급락했다.

중고폰 가입자도 대폭 늘었다. 지

난달까지만 해도 하루평균 약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에 그쳤으나 법 시행 2주 동안 중고폰 가입자의 비율은 10.3%로 급등했다. 하루평균 5000여명으로 77.9% 늘었다.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명씩 생겨남에 따라 중고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KTOA 측은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패턴에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단통법의 근본 취지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보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것으로 통신 과소비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연광·배규민 기자 bkm@**

단통법 손본다고 머리 맞뒀지만... 또다시 惡手 될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촉발된 이통시장의 대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본격 나섰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관장하는 두 수장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휴대폰 값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현실성 없는 발언을 내놓은 터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19면

국회 여야 의원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각계 전문가들이 시행 3주 차의 단통법을 손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설익은 대책을 만들어 단통법을 개악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급지 않은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 서울 신반포로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휴대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를 한자리에 모아 ‘단통법 시행 후 부작용 해소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을 비롯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 U+ 부회장, 이돈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박종석 LG전자 MC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해외출장이라 부사장급 임원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두 부처 수장이 갑작스레 이통3사와 휴대폰 제조사 CEO를 한꺼번에 불러 회동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래부·방통위 두 수장이 이통·휴대폰 CEO 불러
오늘 긴급 간담회
해법 도출 될지 미지수

■최·최, 통신산업계와 담판?

두 부처 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3사 및 휴대폰 제조사 CEO들을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에 대해 최악으로 치닫는 여론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내놓은 발언에 대한 후속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업계에서는 두 수장이 이동통신회사들에는 보조금 인상, 휴대폰 제조사에는 휴대폰 값 인하 같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시행 후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난이 연일 쏟아지면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이통3사 및 휴대폰 제조사 CEO와 회의를 하게 됐다”며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통법 구할 묘책 도출은 미지수

그러나 두 부처 수장과 이통3사·휴대폰 CEO 간 회동에서 깜짝 묘책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단통법 후속 대안을 내놴.

그저 두 부처 수장이 해당 CEO들에게 휴대폰 보조금, 휴대폰 가격 인하와 관련, ‘권유’나 ‘유도’ 선에서 의견을 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개월여 후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인위적으로 휴대폰 가격 인하나 보조금 상향을 밀어붙일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통법 시행 후 혼란스러운 이통시장 상황에서 이통3사가 무리하게 보조금을 높이면 사실상 단통법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고, 휴대폰 제조사가 인위적으로 휴대폰 출고가를 내리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혼란 틈타 전문가 대안도 잇따라
단통법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본래 취지를 살린다고 의견을 내놴.

토론회에서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단통법은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결론적으로 전 국민을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호갱’으로 만든 법이 됐다”며 “이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법을 집행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이 포화에 이른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두기보다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후발사업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더라도) 소비자는 과거에

냈던 가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보다 통신비가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자로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고스톱 패를 다 보여 주면 누가 베풀고 판돈을 올리겠느냐”며 “단통법 보조금 공시는 전 세계에 없는 실질적인 주간 공개담합 가격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박지에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 변화 바람

중고폰 사고 저렴한 요금제 가입 급증

다양한 사양·모델 있어야
단통법 목적 달성 가능

지난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단통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스마트폰 모델 다양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인 통신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통신비 절감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제에 상관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 층이 넓어지면서 중저가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중고 단말기를 다시 사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등 통신 과소비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확연히 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에는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0%, 85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1%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48.2%로 상승했고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0%로 급락했다.

또 다른 변화는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중고폰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2%였지만 지난 14일까지 단통법 시행 이후 2주간 중고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0.3%로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

어지고 본인의 휴대폰 사용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들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식의 '소모적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가치 경쟁'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 '올레 패밀리 박스'로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고 LG U+도 GS리테일과 제휴를 늘려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 또 어린이·노년층 같은 특정 소비자 층 타겟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무선·가족 등 결합할인 서비스도 늘렸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것이 단통법 시행 이후 바뀐 모습이다.

■스마트폰 다양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소비자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가격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단말기 가격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휴대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폰 가격이 절대적으로 비싼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이라도 한국시장에서는 프리미엄급 제품이 주로 팔려 중저가 모델은 출시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같은 모델이라도 프리미엄 사양부터 저가 사양까지 다양한 제품이 국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hw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단통법, 경쟁 막아 소비자만 골탕”

반발 커지자 정부·이통사·제조사 오늘 긴급 회동… 보조금 등 논의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직접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를 불러 17일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다. 회동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그리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 부사장이 참석한다. 삼성전자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LG전자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이 자리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통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들에게 보조금 증액과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 자체가 문제인 만큼 보조금 증액이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높다. 단통법 실패의 원인을 분리공시가 무산된 탓으로 돌리는 것도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 가입 및

단통법 개선 방향

정부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축소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및 판매구조 독립
이통사	보조금 경쟁 아닌 요금 경쟁으로 전환
소비자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합리적 판단 필요

중고단말기 사용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자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의견과 달리 전문가들은 시장경쟁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애초의 시도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예견된 단통법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단통법이 시장경쟁을 제한해 결국 실패한 법이 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병태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경쟁을 소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 논리”라고 주장

했다. 단통법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몰이해로 반기업정서만 키우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주제발표를 한 조동근 교수는 “단통법으로 전 국민의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됐다”며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를 위한 단통법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송종석 교수는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시장에 혼돈만 줄 수밖에 없다”며 “단말기 구입과 이통사 가입이 구분돼야 이통사에서 요금제 경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배경에는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성공이 있다”며 “단통법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진명·추동훈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바른사회시민회의·컨슈머워치 ‘단통법 토론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통신요금 문제의 원죄는 정책 당국이 인허가권을 움켜쥔 데 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단통법을 폐지하고 미래부와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와 조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컨슈머워치 주최로 열린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담합을 묵인하고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판매점 제조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폐지하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단통법 폐지를 외쳤다. 단통법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가로막아 가계 통신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경쟁을 질식시켜 소비자 편익을 꺾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교

수도 “단통법이 그나마 있던 경쟁의 싹마저 없앴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출고가 95만원짜리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가격(2년 약정 시)이 한국에선 79만6000원, 미국에선 32만원으로

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면 요금인가제부터 폐지를

미래부·방통위 등 정부 휴대폰 규제권한 뺏아야

한국 가격이 2.5배 비싸졌다”는 것이다.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신제품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구형 모델을 처분하는 전략 수단을 빼앗겼다. 판매를 시작한 지 15개월 이상 지나야 휴대폰 할인 판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가 너무 잘 팔리면 삼성전자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갤럭시노트4 가격을 할인할 필요가 있다. 제조사의 이런 탄력적인 시장 대응을 원천 봉쇄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 등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문화일보 제공

있는 것이 단통법이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은 정부 소유의 전파 사용권과 사업권을 특정 기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휴대폰은 공산품으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 없애야” 그렇다면 단통법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다. 이 교수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요금인가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 요금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자(SK텔레콤)가 정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가격선도제다.

◆“분리공시·자급제 해법 아냐”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리공시제, 단말기자급제가 단통법 문제의 해법이 아니

라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와 단말기자급제를 도입하면 보조금이 더 줄어들고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효과만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단통법 시행 후 국산 휴대폰 구입 비용이 높아지자 외국산과 중국 휴대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8~14일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 휴대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늘었다.

전설리기자 sljun@hankyung.com

“단통법, 시장경쟁 제한이 문제 분리공시 재추진도 해법 아냐”

시민단체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

정부 지원금 상한선 지정...담합 묵인
“경쟁 활성화로 가격·요금인하 유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을 제한해 경쟁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시민단체 등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리공시 재추진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보수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교수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단통법의 경쟁 제한 요소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차별금지라는 소비자 편익을 목표로 제정한 단통법이 시장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손해를 안기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로 정부가 지원금 상한선을 지정하고,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한 점을 꼽았다. 보조금을 활용해 경쟁할 통로를 사실상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눈치를 보며 경쟁에 나설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경쟁은 상대방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라며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통법으로 소비자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고,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문제 해법으로 ‘경쟁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

통사들이 단말기 가격인하와 요금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허가하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요금 인하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요금경쟁이 반드시 1위 사업자 주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등 요금인가제 폐지론에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관철하지 못한 것을 모든 단통법 논란의 원인으로 돌리는 경향도 비판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만 제대로 됐더라면 보조금이 지금 같은 수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서 분리공시를 저지했는데, 비판과 질책은 우리가 받고 있다.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분리공시를 재추진하는 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동근 교수는 “통신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사업자가기 때문에 통신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조사가 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당국이 변명에 불과한, 실패의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요금인가제 없애 이통사 경쟁 촉진시켜야”

시민단체 ‘단통법’ 해법 토론회 보조금 상한선 소비자 혜택 줄어 이통사 “시행 후 통신 과소비 감소”

이동통신 시장의 고객 차별을 줄이고 가계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시작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소비자·판매점의 불만이 커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단통법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6일 개최했다.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조금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동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촉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보조금 상한선을 묶어두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다”며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이며, 제조업체·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후발기업이 품질개선을 할 경우, 평균 8.7% 요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금인가제는 ‘정부 주도의 담합’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는 1996년 1등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아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조금 상한선을 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는 “한국의 휴대전화 산업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와 ‘얼리 어답터’적 경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보조금 상한선을 둔 게 결국은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혼돈을 야기했다”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확대와 요금 할인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내리려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외국에 비해 국내 제조사를 역차별하고,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과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오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였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이달 48.2%로 늘었다. 중고폰 가입자도 일평균 약 2900명(전체 가입자의 4.2%)에서 법 시행 이후 5000명(10.3%)로 증가했다. 연합회 측은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 명씩 생겨나고 있어 중고폰 이용 소비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따라 이통사의 경쟁 구도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고객 가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최창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핵심 경영진들과 긴급 회동을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 수장이 이들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용·이소아 기자 hysohn@joongang.co.kr

“이통사 가격경쟁 유도해 통신요금 내려야”

시민단체 ‘단통법 토론회’ 쓴소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보름 만에 여론의 못매 속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은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갱)’으로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통신요금 인하 경쟁과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연다.

소비자들이 단통법에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차별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기 때문이다. 30만 원 이내로 제한된 보조금마저 고가 요금제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요금은 더 비싸졌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 등 시

“소비자 손해보고 이통사가 수혜 보조금 분리공시는 해법 안돼”

정부당국-업계 오늘 긴급간담회

민단체 주최로 열린 ‘단말기 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불만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라며 “사실상 정부 주도 담합과 다름없는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최근 뒤늦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분리공시(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 시행 논의에 대해서도 단통법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관계자들은 단통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리공시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사들도 분리공시 공방을 끝내고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요금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대전화기 지원금 상한선이 이미 30만 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는 분리공시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휴대전화기 출고가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조사들은 “국내 시장은 프리미엄 폰 선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 구매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출고가 자체가 다른 건 아니다”고 해명한다.

반면에 이통사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높다”며 “단통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스마트폰 가격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OA는 통신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미 단통법의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만5000~4만5000원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지난달 31.0%에서 이달 1~14일 48.2%로 높아진 반면에 8만5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27.1%에서 9.0%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창덕 기자

서울신문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15면 경제

외산·중고폰이 누린 단통법 반사이익

샤오미·화웨이 등 작년 동기비 190%↑ 소비자 단체 “요금 경쟁 통신비 내려야” 정부, 오늘 이통사·제조사와 긴급회동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인 각본이다.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닌 이동통신사들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소비자 차별은 줄고 선택권이 늘었다.” (이세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조사연구실)

단통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시행 일주일도 안 돼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이 시작되더니 16일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 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통사들은 이날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 과소비가 진정세를 보였다며 맞섰다. 사태가 깊어지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통사와

제조사를 모두 불러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 교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다”며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 때문으로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내리려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요금제를 현실화하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모임인 KTOA는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면서 중저가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소비자 혜택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KTOA가 지난 1~14일간 이통 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저가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31

%에서 48.2%로 늘어났다. 기본료 8만 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급감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9월에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가입비율이 각각 31%, 27.1%였다. 중고폰 가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중고폰 가입자 수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 2주간 가입자 수는 일평균 5000명으로 77.9% 늘었다.

실제 G마켓에서는 지난 8~14일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 외국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급증했다. 오픈마켓 ‘11번가’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2주간(1~14일) 중고 휴대전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81% 늘었다.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는 주무부처 장들을 비롯해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단통법 시행...이용자 차별 ↓ 선택권 ↑

**이통사 서비스 차별화 경쟁 가속
가계 통신비 인하 극대화 위해
제조사 스마트폰 가격 인하 필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감소하고 선택권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중심 차별적 서비스 경쟁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9월 2만5000~4만5000원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0%,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1%였지만 이달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증가했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0%로 급격히 줄었다. 또, 중고폰 가입자도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 9월에는 일평균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지만, 중고폰 가입자 비율은 10.3%인 일평균 5000여명으로 77.9% 증가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단통법으로 이통 가입 패러다임이 급변하자, 이통사도 혜택을 늘리는 등 서비스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KT의 '올레 패밀리 박스'를 비롯해 SK텔레콤 '찾아가자 T멤버십' 등 멤버십 혜택을 늘리거나

KT '몽치면 올레', SK텔레콤 '착한 가족할인', LG 유플러스 'U+가족친구할인' 등 유무선·가족 등 결합할인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혜택 극대화를 위해 제조사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단통법 이후 판매된 갤럭시노트4 출고가는 100만원에 육박한다. 단통법 시행 직후 갤럭시노트3(SM-N900)가 7만7000원 인하된 것을 제외하고 출고가를 낮춘 사례는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장려금 비용을 절감해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지만, 단말 교체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단통법은 모든 이용자가 차별없이 합리적 가격으로 단말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조사도 단말 가격 인하에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의 인식 변화와 결단이 전제되지 않은 한 단통법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 삼성전자·LG전자·팬택 제조 3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부자위한 초이스노믹스” 체면구긴 초이노믹스

여야, 최경환 경제팀에 잇단 질타

이한구 의원 “빛내서 경기부양 위험한 발상”

최경환 “경제 회복국면… 통신비 인하 추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초이노믹스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깎아내렸고 여당마저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초이노믹스는 부자들만 행기는 경제정책=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초이노믹스를 ‘빛잔치’ ‘서민 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빛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대기업 총수 사면 등 부자·대기업 편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한 ‘초이스노믹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며 최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했는데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30대 재벌을 위해 서민들의 혈세를 빨아들

이는 이런 정책이 되풀이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적극 맞섰다. 그는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 등의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기업인에 대해 ‘사면 빨리 하자’ ‘가석방 빨리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초이노믹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빛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L(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히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확률이 높고 가계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총리로 취임할 때는 세월호 참사 직후라 분위기가 위급했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news1.kr) =장수영 기자

이어 “현재 정부는 증세보다 내수를 살려서 경제 선순환구조로 가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통신비 인하해야”=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전망을 묻는 의원들에게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 2분기 이후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살아나고 있다”며 “2분기에는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 영향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연초 4.1%를 전망했지만 세월호 사고로 2분기에 부진해 3.7%로 대폭 하향조정했다”며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있어서 지난번 5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놓았고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인하해 올해 (성장률이) 3.7%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가계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의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경직성

가계지출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에 동의한다”며 “통신비 인하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규제완화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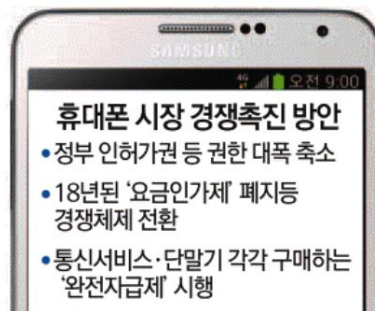
최 부총리는 이밖에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이 경기회복 모멘텀으로 이어지려면 관련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법안 미통과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세종=정진우·배소진·김광희 기자 econphoo@

단통법의 역설 <하> 해법은 요금인가제 폐지

보조금,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1등업체가 요금제 선도
사실상 정부 주도 담합
기기-서비스 각각 구입
완전자급제 도입하면
이중경쟁에 선택폭 확대
단말기 가격 인하 가능



제한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신규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가 18년이 지난 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요금 인가제가 1등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가격선도제' 방식이라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담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매번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2개 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를 추종하는 방식이다. 현재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고집하는 것은 인허가권이라는 규제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단말기 판매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현실화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려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 해결책은 '완전자급제'=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시장이 유독 논란이 많은 것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선택하는 결합상품 방식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각각 구입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면 단말기 제조사 간, 이통사 간 2번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처럼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한 구매방식이면 제조업자는 판매 촉진 차원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통사들은 자체 보조금을 추가해 단말기 출고가를 결정하고 요금제를 내놓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조사와 이통사는 마케팅비용 만큼 출고가와 요금제를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병태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가 아닌 이통사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게 되며 이럴 경우 이통사와의 보조금 논란 보다는 제조사 간 많이 팔기 위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도 폭넓어지고 단말기 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통법 부작용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며 "단통법의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당연한 귀결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려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 등의 주최로 열린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경쟁을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소비자 차별을 없앴고, 휴대폰 과소비 문화를 바꿔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가 '경쟁'을 방해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해야=요금 인가제는 PCS 서비스가 시작된 1996년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더 싼 요금제 놔두고... 소비자 '호갱' 만드는 이통사

<이용하기 좋은 손님>

새 단말기 '12%요금할인' 홍보 미적
'보조금보다 10만원 더 저렴' 안 알려
미래부 "곧 단통법 사례집 배포 예정"

최신 단말기 구입시 단말기 지원금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가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나 '12% 요금할인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의 경우엔, 단말기 보조금보다 12%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약 10만원 더 저렴하지만 제대로 아는 구매자들은 많지 않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이 같은 혜택을 대리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된 단말기 보조금과 달리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만 100% 지급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영업점들도 득보단 실이 크다. 단말기 보조

이통3사 단말기 지원금·12%요금할인 지원금 비교

모델명	출고가	단말기별 지원금 (이통3사 평균 금액)				
		10만원 요금제 (SKT·K)	8~9만원대 요금제	6~7만원대 요금제	5만원대	3~4만원대
12%할인 지원금+vat(KT기준)		31만4160원	22만8360원	17만8200원	13만680원	9만9000원
갤럭시노트4	95만7000원	13만6000원	10만8000원	8만3500원	6만3600원	4만9000원
갤럭시S5 광대역 LTE-A	89만9800원	21만5500원	16만7600원	13만6300원	9만9500원	6만4800원
G3cat 6	92만4000원	22만5500원	17만3300원	14만900원	10만3200원	6만7200원
갤럭시노트2	84만7000원	55만8500원	43만9000원	35만9900원	26만3500원	17만800원

※출처: 각사·KT 대리점 공시표

금으로 가입시킬 경우, 이통사로부터 판매 건당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반면 12%요금할인 가입시 영업점은 이통사에게 6~7%수준의 고객 관리 수수료만 받는다.

이통3사 중 12% 할인제를 알리는 사업자는 KT가 유일하다. KT는 소비자가 할인요금제와 단말기 지원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영업망에 공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현재 단말기 지원금만 공시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에게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안내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단통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들에게 12%요금할인제를 가입자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모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제도에 대해 이통사와 유통망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며 "12%요금할인에 대한 공지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망과 이통사에 권유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bogom@



단통법 시행 뒤 공단말기 '날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 탔
지마켓, 외국산판매 작년비 190%↑
11번가, 중고폰 전달보다 80% 늘어**

공단말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조금 대신 요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뒤, 오픈마켓(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곳)을 통한 외국산 공단말기(무약정폰) 구입이 크게 늘고 있다. 중고폰 거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지(G)마켓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의 외국산 휴대폰 공단말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0% 늘어났다고 밝혔다. 15일에도 지마켓 휴대폰 공단말기 베스트 상품 10위권에는 '샤오미 홍미 노트 LTE'(25만170원), '소니 엑스페리아'(79만9000원), '블랙베리 Q10'(33만2930원) 등의 인기 외국산 휴대폰 제품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지마켓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외국산 휴

대폰 공단말기를 한데 모아 할인 판매하는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마켓 측은 "판매중인 대부분의 외국산 휴대폰 공단말기가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의 엘티이(LTE) 망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며 "샤오미 MI4 등의 일부 공단말기는 엘지 유플러스(U+)의 엘티이 망도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익 지마켓 모바일음향팀장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비교하기 쉽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 알뜰한 구매가 가능하다"며 "공단말기를 구입해 통신사 유심칩을 꽂으면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관련 제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고폰 거래도 크게 늘었다. 에스케이플래닛 11번가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된 1일부터 13일까지 중고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67%, 전월 대비로는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 정건길 중고상품 구매담당자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중고 제품도 새것이나 다름없는 최상의 상태를

갖춘 것이 인기 요인"이라며 "단통법 시행 뒤 중고폰 공단말기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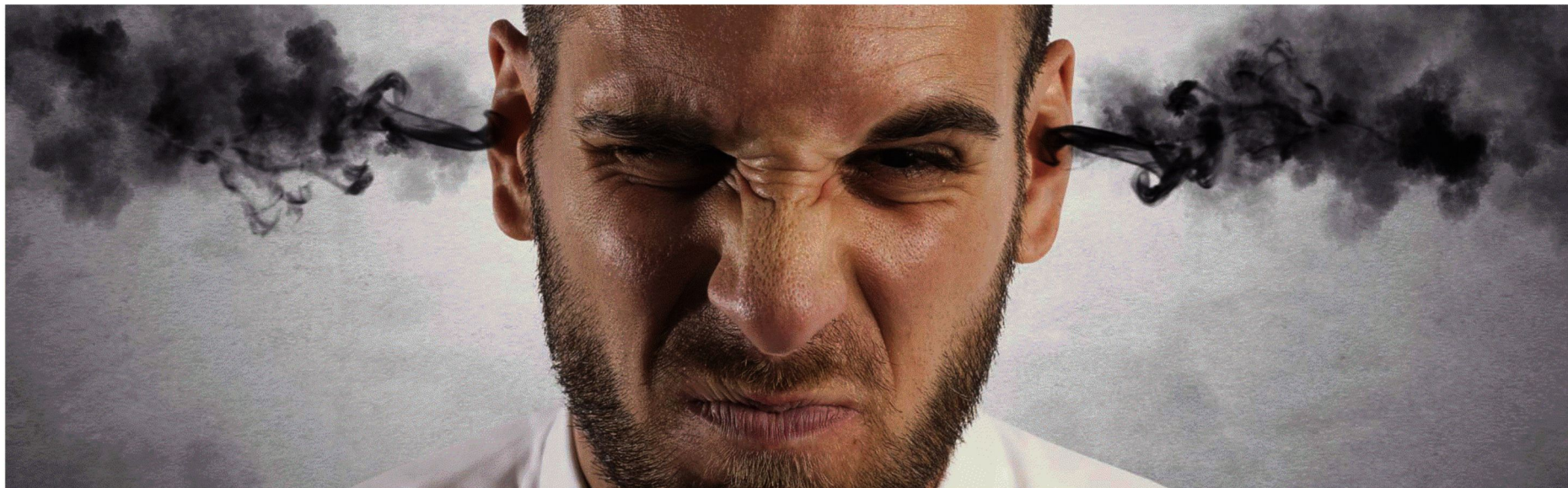
11번가는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행복한에코폰과 손잡고 복잡한 상품 등록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수거부터 검수까지 전문업체가 대행해주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삼성, 엘지,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상태에 따라 아이폰 5S(16GB)는 최고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에 사들인다. 판매할 스마트폰 모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가 완료되면 택배(착불)로 해당 업체에 보내면 된다.

성윤창 리빙레저 그룹장은 "단통법 시행 뒤 중고폰이나 단말기자급제 상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11번가는 전문적인 매입 업체와 질 좋은 중고 상품 판매업체를 영입해 전문적인 중고 상품 채널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지난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처음 단통법이 나온 이유는 휴대전화 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지는 취지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진 단말기 가격 때문에 소비자의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금의 단통법을 보고 있노라면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 논리만 있을 뿐 소비자를 위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이미 생활필수품이다. 그렇기에 고장이나 분실 등이 발생하면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일부 소비자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버즈는 낮은 몸값과 준수한 성능을 지닌 스마트폰을 찾아왔다.

이버즈 김태우기자 tk@ebuzz.co.kr



분통법이라는 사람들 많지만

아이폰6 보조금, 단통법에 적용해보니... 10만원대 요금 2년 써야 최고 40만원 지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이다. 1년 가까이 국회에 표류하던 해당 법은 올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단통법에 거는 기대는 컸다.

국내 휴대전화 유통은 이동통신 3사가 맡고 있다. 알뜰폰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유통되기는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힘은 막대하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가 형성성 있게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도한 보조금을 일부에만 쏟아붓다 보니 같은 단말기라도 누구는 80만원에 사고 누구는 10만원에 사는 일이 생겼다. 소비자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생긴 것이 단통법이다.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지급 금액을 투명하게 공시해 어느 매장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단말기별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전 국민을 호경(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이다. 단말기 지원금이 적다 보니 스마트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가격 상승에 단말기 유통시장은 얼어붙고, 폐업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폰6 실구매액 한국이 세계서 가장 높다

10월 31일 새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미국 649달러(약 70만원), 일본

6만7800엔(약 67만원) 수준이다. 국내는 아직 출시 전이라 가격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애플이 매년 전작과 같은 가격을 책정한 점을 고려하면 아이폰5S와 동일한 74만원으로 예상된다. VAT를 더하면 81만4000원이다. 출고가만으로 7만원가량 차이난다.

하지만 실제 구매 가격은 천지 차이이다. 미국은 2년 약정 시 아이폰6 구매 가격이 199달러(약 21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신규나 번호이동 시 공짜다. 현재 아이폰5S의 보조금은 16만

6000원. 이와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다면 아이폰6의 구매 가격은 64만8000원이다.

만약 보조금 상한선이 35만원이고, 이동사가 최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리점의 15% 추가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4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단통법 테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조금을 받아도 41만4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만원대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써야 한다. 소비자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숨통폰도 잘 찾아보면 많습니다

저렴하다고 성능까지 싸구려 취급 마라

단통법으로 단말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고장이라도 난다면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중고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고폰도 단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출고가는 낮지만 준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찾아보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원플러스 '원'

갤럭시S5와 성능 비슷...가격은 반값

원플러스원은 국내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갤럭시S5와 비슷한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16GB 모델이 299달러(약 30만원)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 탓에 갤럭시S5의 반값으로 유명해졌다. 해외 직구로 구매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하드웨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01을 쓰며, 램은 3GB다. 저장공간은 16GB와 64GB 두 종류가 있다. 64GB는 349달러다. 5.5인치 화면 크기에 풀HD 해상도를 지원한다. 제원만 보면 갤럭시S5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 중국폰임에도 손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만들새도 상당한 수준이다. 일체형 제품으로 깔끔하게 마감처리가 돼 있다. 한마디로 국산 제품과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인데, 사이아노젠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다. 파워유저 사이에서 유명한 그 '사이아노젠 모드'가 맞다. 안드로이드를 제조사보다 더 잘 튜닝한다는 평을 받는 만큼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순정 느낌이 강하다.



소니 '엑스페리아 Z3 콤팩트'

KT서 보조금...국내 품질인증 획득

엑스페리아 Z3 콤팩트는 소니가 하반기에 내놓은 전략 스마트폰이다. 국내에서는 자급제폰으로 판매되지만, KT에는 지원금 제품에 이름이 올라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59만9000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성능은 모자람이 없다.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를 품고 있으며, 207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다. 화면크기는 4.6인치며, 해상도는 1280×720을 지원한다. 해상도가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인치당 픽셀 수는 319ppi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IP68등급의 방진·방수 기능도 갖춰 수심 1.5m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다.

플레이스테이션4와 연동되는 PS4 리모트 플레이(PS4 Remote Pl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HRA),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일반 음원을 고해상도 품질로 '업스케일(upscale)'하는 DSEE HX 기능을 적용했다. 출고가는 59만9000원이다. 국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자급단말기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샤오미 'MI4'

G3급 사양에 33만원...3G 개통

샤오미는 애플 짝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이지만, 2014년 2분기 글로벌 판매량 5위에 등극할 만큼 잘나가는 곳이다. MI4 또한 갤럭시S5나 G3와 비슷한 사양을 지녔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의 제품이다. 1999위안으로 33만원가량 한다.

화면 크기는 5인치로 풀HD 해상도를 품었다. 퀄컴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 3GB 램, 전면 800만/후면 1300만 화소 카메라, 308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지녔다. 다만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TD-LTE만 지원하는 제품이라 국내에서는 3G로 개통해야 한다. 올 연말에는 국내 LTE를 지원하는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테두리는 메탈 소재를 적용했으며 외형은 무난하다. 아이폰 짝퉁이라는 별칭답게 디자인에서 아이폰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메이주 'MX 4'

2070만 화소...해외 직구하면 29만원

메이주는 샤오미와 더불어 대륙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기업이다. 샤오미가 자체 커스텀된 MIUI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주도 Flyme라는 자체 커스텀를 쓴다. 지금 소개하는 MX 4에는 4.0 버전이 쓰인다. 화면 크기는 5.36인치며, 해상도는 1920×1152를 적용했다. 소니의 IMX220 센서를 사용한 2070만 화소 카메라를 품고 있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옥타 코어 6595를 쓴다.

눈길을 끄는 건 가격 정책이다. 샤오미를 많이 의식해서인지 MI4보다 더 낮은 가격인 1799위안으로 출고했다. 29만원 정도다. 물론 국내에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해야 하지만,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다.



화웨이 'X3'

미디어로그서 판매...LTE-A도 가능

중국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드디어 국내에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X3'를 내놓은 것. X3는 '아너 6'를 국내용으로 변형한 모델이다.

화면 크기는 5인치로 1920×1080 풀HD 해상도를 지원한다. 여기에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까지 이용할 수 있다. 후면 카메라는 1300만화소며, 전면 카메라가 500만화소인 것이 눈에 띈다. 배터리 용량은 3000mAh이며, 슈퍼 세이빙 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16시간 연속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화웨이는 설명한다.

출고가는 52만8000원으로 매력적이다. 사실이 모델은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야너6가 중국서 지난 7월 출시될 당시 가격은 359.9달러로 약 37만원이었다.

“지상파, 700MHz 대역 54MHz 확보해도 UHD방송 어렵다”

〈전국〉

지상파방송사가 700MHz 대역 54MHz 대역폭을 확보해도 전국 초고화질(UHD) 방송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파간섭을 피해 전국 UHD 방송을 위해서는 최소 90MHz 이상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 지상파가 UHD 방송을 명분으로 700MHz 할당을 요구하기 전에 UHD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 소요량 계산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5만여 UHD TV 사용자 모임인 ‘UHD 유저 포럼’ 이군배 대표는 “지상파 방송사의 54MHz 요구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700MHz 대역 전체 대역폭 108MHz 중 재난망 주파수 폭(20MHz)을 제외한 88MHz를 모두 지상파에 할당해도 전국 UHD 방송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전국 UHD 방송을 위해 최소 9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섭 현상을 피하려면 전국을 수도권(4개 채널), 지역권(3개 채널×3개 권역), 전국권(2개 채널)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채널당 최소 6MHz를 사용하면 각각 24MHz, 54MHz, 12MHz 등 총 90MHz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주장은 지난해 방송사가 발표한 ‘국민행복 700플랜’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됐다.

방송사들은 700MHz의 54MHz 폭 주파수를 활용해 11개 채널 중 우선 9개 UHD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UHD 방송에서는 다중주파수망(MFN)을 단일주파수망(SFN)으로 바꿀 수 있어 9개 채널로도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계획이라며

‘UHD 유저 포럼’ 주장

전파간섭 피하려면 90MHz 폭 필요
주파수 소요량 계산부터 선행돼야
방송사 ‘국민행복 700플랜’ 반박

동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EBS와 KBS2, OBS는 몰라도 SBS, MBC, KBS1은 엄연히 지역 방송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SFN 방식이라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6MHz씩 최소 15개의 주파수가 필요한데 국민행복 700플랜에서는 이 점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날로그에서 지상파 HD방송으로 전환 되기까지 10여년 동안 전국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이 병행 방송됐다”며 “UHD 방송도 상당 기간 HD 방송과 병행해야 하는데 일각의 주장대로 일부 지역만 UHD를 방송하고 나머지 지역은 HD 방송 종료에 맞춰 전환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날로그 시절 사용하던 초단파(VHF) 대역을 조정해 UHD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톱박스를 써서 HD 주파수로 UHD 방송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파수는 한번 정하면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행복 700플랜이 도출한 54MHz 대역폭을 재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사에서 계산한 소요량은 재난망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통신에 할당된 40MHz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즉 68MHz(108MHz-40MHz) 중 보호대역을 제외한 폭이 54MHz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통신 기술인 롱텀에벌 루션(LTE)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 분야전문가인 한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방송사가 도출한 54MHz는 이동통신 방식이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이라는 전제 하에 이격 거리 등을 따져 계산한 것”이라며 “하지만 LTE에서는 간섭을 막기 위한 보호대역이 달라져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이 방송 편들기에

나서면서 15일로 예정됐던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무산됐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파수 정책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재난망 주파수 배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소모적 주파수 싸움으로 700MHz 배정으로 가닥이 잡힌 재난망 주파수 확정이 미뤄지면서 국민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여권 편향 MBC, '공정방송' 조항 단협서 빼려해

〈문화방송〉(MBC)이 깊은 '침묵'에 빠져 있다. 여권 편향적인 보도 태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다. 문화방송의 한 기자는 "기자들이 무서워서 카톡도 안 한다. 실시간 감시를 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최근 한 기자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사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프로그램 제작 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여러 장치들이 사실상 무너져 내린 것을 주요하게 꼽는 목소리가 높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노조가 참여하는 '제작 자율성 확보' 제도를 여러 형태로 운영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본부장 선임평가제도다. 보도의 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을 구성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방송〉(KBS)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한 본부장 선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직조합원 3분의 2가 불신임의 뜻을 표시하면 본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최근 세월호 국면에서 벌어진 '김한영 사장 사태'를 계기로 노조는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임 건의 수준이 아닌 해임을 강제화하도록 할 요량이다. 노조는 이를 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고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에스비에스〉(SBS)도 같은 제도를 갖고 있다. 재직인원 3분의 2가 본부장에 대한 부적합 판단을 하면 이 결과를 경영진에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공정성 시비가 일면 노조가 편성위원회 개편을 요구할 수 있다. 에스비에스 노사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엘티이 뉴스' 폭지가 다시보기 서비스 등에서 삭제된 사안 등을 안건으로 한 편성위원회를 열었다. **(표 참조)**

물론 문화방송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노

사가 참여하는 공정방송협의회 제도인데, 노조가 회의 개최를 요구해 보도 등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다.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본부장 평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사장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이와 별개로 국장의 보직 변경 등의 요구도 가능하다. 이는 모두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상으로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김재철 전 사장의 취임 뒤 회사는

노사 참여하는 공정방송협의회 '김재철 체제' 이후 효력 상실 제작 자율성 보장제도 와르르 '보도 비판' 보고서에도 워선 침묵

노조 '공방협 복원' 10여차례 협상 사측 "프로 제작, 협상 대상 아냐"

단체협상을 사실상 파기했다. 김 전 사장은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다가 노조의 끈질긴 요구로 몇 차례 열긴 했지만, 2012년 파업을 거치며 2013년 초 단체협상의 효력이 만료됐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진행된 실무협상을 통해 공정방송협의회 복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회사 측은 '공정방송 부분은 회사 책임이고 노조가 개입하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며 이 부분을 단협에서 아예 빼려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조에서 발행하던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보고서도 올림 없는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민실위 보고서가 나오면 보도 책임자들이 직접 연락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 이제는 아무런 반향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방송 회복’을 내걸고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문화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012년 7월1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업무 복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상파 3사의 노사 참여 제작자율성 확보 장치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자율성 확보 장치	본부장 선임평가제	본부장 평가 의견 조사, 공정방송협의회	본부장 중간평가, 노사 동수편성위원회
근거	노사 단체협약, 편성규약	공정방송협의회 규정	공정방송협의회 규정, 편성규약
운영방법	재직조합원 2/3 이상 불신임 때 해임 건의	과반수 조합원의 2/3 이상 부적합 판단하면 사장에게 결과 전달	재직인원 2/3가 부적합 판단하면 경영진에 결과 전달, 노조가 편성위원회 소집 요구 가능
현재 상황	노조, 불신임 받은 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강제화 추진 중	2013년 초 단협 시효 만료로 사실상 상 폐기. 현재 진행 중인 단협에서 회사는 공방협 부분 뺄 것 주장	정상 운영 중

문화방송이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역행하는 모습이 유독 두드러지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다. 전규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신문방송학·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존재 가치를 잃는 유평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다른 장치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보도 등 프로그램 제작은 노조와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9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성위원회가 발족됐고, 시청자위원회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위원회는 회사 쪽에서 위원을 모두 선임하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 역시 노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긴급진단 특하면 터지는 납품비리, 위기의 홈쇼핑

<하> '상생 홈쇼핑'의 조건

비리업체 '사업권 박탈' 등 극약처방 필요

'신규 사업자는 있어도 퇴출되는 사업자는 없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홈쇼핑업체의 병폐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것은 국내 홈쇼핑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소수의 홈쇼핑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납품업체가 절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비리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19면

국내 홈쇼핑 시장은 지난 1995년 출범 당시 34억원에 불과했지만 20년 만에 15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과열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강력히 규제하면서 20년이 지났음에도 홈쇼핑사업자는 6개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일본(5조원)에는 30개업체가 있고 중국(11조8,000억원)은 100개사가 넘는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홈쇼핑사업자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시장을 6개업체가 독식하다 보니 '황금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송출수수료도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홈쇼핑업체가 지상파 채널 중간에 위치한 채널번호를 받기 위해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2009년 4,093억원에서 지난해 9,800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홈쇼핑 6개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6,844억원이었다.

매년 1조원대에 이르는 송출수수료를 지급하는 홈쇼핑업체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유통업체에서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홈쇼핑 6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4%에 달해 백화점 3사 평균치인 28.9%보다 5.5%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홈쇼핑 시장,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현행	개선
현행 독과점 체제가 구조적 병폐 양산	신규 사업자에게 문호 개방해 경쟁체제 유도
윤리경영 등 업계 자구책으로는 한계	비리 사업자에게 재승인 취소 등 강력한 처벌
채널 경쟁에 송출수수료만 매년 1조원	주객전도된 송출수수료 정부가 관리 및 감독

15조 규모 세계 최대 시장
불과 6개 업체가 나눠먹어
사업자 늘려 경쟁유도를

상설감시기구 설립 감독 강화
영업익보다 많은 송출 수수료
기형적 구조도 바로잡아야

겉으로 드러나는 수수료가 이 정도일 뿐 홈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배송비, 사은품, 모델료, 제작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50%를 웃도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기업과 (32%) 과중소기업 (34.7%)에게 받는 수수료 차별도 여전하다. 지난 4월 납품업체로부터 20억원대 금품을 수수해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구속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대기업에게 27.8%의 수수료를 받은 반면 중소기업으로부터는 35.2%를 징수해 홈쇼핑업체 중 가장 중소기업에게 고압적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홈쇼핑 입점을 신청한 중소기업 제품 2,780개 중 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5개사에 방송된 상품은 117개 (4.2%)에 그쳤다.

홈쇼핑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도 홈쇼핑업체에 만연한 적폐를 고착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홈쇼핑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냈다. 하지만 비리 임직원에 대한 단발성 처

별로 끝날 뿐 홈쇼핑사업자에게서 사업권을 박탈한 사례는 전무하다. 재승인 심사의 주요 항목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아닌 선정성과 사행성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을 여전히 유통산업이 아닌 방송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홈쇼핑업체가 뒤늦게 윤리경영에 나섰지만 고착화된 관행을 단시간에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지금이라도 재승인 취소라는 철퇴를 통해 비리 홈쇼핑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잇따른 불공정 관행과 납품 비리로 홈쇼핑을 치르고 있지만 홈쇼핑업체의 '밥그릇 챙기기'는 오히려 수위를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제7홈쇼핑을 신설하겠다고 하자 홈쇼핑업체는 인터넷TV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T커머스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신규 홈쇼핑의 등장으로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자 일찌감치 확보해둔 T커머스 사업권을 지금에서야 활용하겠다는 꼼수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국유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홈쇼핑 시장은 제한된 채널과 한정된 시간이라는 요소가 결합되면서 다른 유통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며 "재승인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 못지 않게 홈쇼핑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설감시기구를 마련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co.kr

‘정치심의’ 탓에 ‘방심위 불복’ 재심 청구 증가세

현 정부 들어 28건...대부분 기각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일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의 법정 제재 조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5건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2013~2014년 9월까지) 28건으로 1.8배 늘었다.

모두 방송심의 청구로, 통신심의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 때 2008~2010년 각 0~2건, 2011~2012년 각 6건으로 총 15건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난해 16건, 올해 9월까지 12건이 청구됐다.

특히 내용 측면에서, 방송사가 사회·정치적 사안을 보도한 데 대해 방심위가 중징계(법정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불복한 건이 늘었다.

지난 정부는 2건이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한국방송 <추적 60분>, 제이티비시 <뉴스큐브>), 엔엘엘 및 대통령 퇴진 요구 발언 관련 박창신 신부 인터뷰(시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 등 5건이다. 이들 재심 청구는 모두 43건 가운데 4건이 낮은 수위 제재로 경감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기각됐다.

전병헌 의원은 “방심위의 ‘정치심의’로 무리한 제재 처분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12명 위원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9명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국민일보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25면 사람들

한국언론학회 신임회장에 심재철 교수

‘탐사 저널리즘’ 등 주제 학술대회 열려

심재철(사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18일 한국언론학회 2014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41대 회장에 취임한다.



심 교수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싱턴대학에서 석사, 위스콘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스다코다대학 및 미주리대학 교수에 이어 고려대 언론대학원장과 고대신문사 주간 등을 지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탐사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등의 주제가 논의된다.

오병선 선임기자

신뢰 무너지는건 한순간... 정치논쟁 키우지 말고 빨리 매듭을

<하> 인터넷실명제 교훈 잊지 말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카톡의 일 평균 이용자 수는 일주일 새 40만명이나 줄었다. 그런데 카톡뿐만이 아니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같은 기간 라인(107만명)이나 네이트온(17만1,000명), 챗온(2만2,000명) 같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사용자 이탈이 대거 일어난 것. 최대 경쟁자의 수난(?)이 '유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은 분명 쉽게 해결되지 않을 이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은 이제 막 논의의 첫발을 땀다. 문제는 속도다. 국내 인터넷 기업, 나아가 정보기술(IT) 업계는 한 번의 논란으로 큰 치명타를 입은 경험을 몇 차례 했기 때문이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용자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금방"이라며 "지금은 논쟁을 하기보다는 빨리 논란을 봉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검열을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빠아픈 교훈=국내 인터넷 업계는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그때도 현재와 비슷했다.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을 잡겠다며 2009년 도입됐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엉뚱하게 국내 포털시장의 판도를 바

꿔놓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네이버·다음에서 구글로 '갈아타기' 시작해 2009년 686만명이던 구글의 PC 순방문자 수는 지난해 9월 3,020만명으로 늘어나며 국내 포털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모바일로 넘어오면 구글이 완승

을 거둔 상태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구글을 찾는 국내 방문자 수는 5월 기준으로 구글이 2,075만명,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1,641만명과 1,362만명이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도 비슷하다.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2%에서 6월 79.4%까지 치솟았



정홍원(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2위인 판도라tv는 3.77%의 점유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가 '못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심하다"며 "제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변명으로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악성댓글'을 잡겠다고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관련 법안은 곳곳에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권현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산업 규제에 공감대를 부정할 수 없지만 최근 규제는 이용자들의 이해와 시장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크다"며 "현행 규제가 창조적 기업의 탄생에 진입규제로 작용하

"온라인 악성댓글 잡자" 2009년 규제 도입했다
네이버·다음 이용자 구글로 갈아타기 시작
국내 포털시장 지각변동

사이버검열 논란 해소
제도적 장치 고민하고
기업도 대응원칙 세워야

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정보 제공 원칙' 세워야=문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IT 업계로 확대되면서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가고 있는 상태다.

정부 역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에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업계와 전문가들이 만나 '사이버 검열 논란'을 해소할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포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적법절차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 국민과 업계가 납득할 방안 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며 "국회 역시 정치적 논쟁보다 대안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내 기업도 위기에 대응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톡(합병 전 기준)은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요청을 그대로 수긍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안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압박이 있으니 감청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해

석해 과거 대화 내역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통신 사실확인원 해달라는 수사기관에 먼저 컴퓨터 로그 기록을 제공하고 미리 대화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며 "이런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글이나 애플·페이스북이 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에 반발하고 나선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 다른 IT 업계 전문가는 "핵심은 '미국 기업도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한다'가 아니라 '할 때는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준기자 myesandno@sed.co.kr

카톡, 흉악범·간첩 잡는 1등 공신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내일 안 되면 모레 어떻게든 할 테니 조조해하지 마라.’

검찰이 지난 7월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김형식(44)서울시의원을 구속 기소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다. 김 의원의 친구 팽모(44)씨가 ‘어떻게든 송씨를 살해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팽씨는 송씨 살해 후에도 김 의원에게 ‘만약 뽀록(들통) 나면 년(김 의원) 빠지는 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이 완전히 부인했지만, 이 메시지들은 그의 살해 지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됐다.

최근 ‘사이버 감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카카오톡은 범죄 수사에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을 활용해 범행을 적발하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 오피스텔에선 여고생 A양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미궁(迷宮)에 빠질 뻔한 이 사건도 카카오톡(이하 카톡)이 결정타(打)였다. A양의 지인 B씨가 카톡을 이용해 친구에게 ‘썩은 냄새가 난다. 징역 같까? 삼 사서 물어버릴까?’ 등 메시지를 보냈다가 덩미가 잡힌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카톡은 특목한 역할을 했다. 검경 합동수사부가 선원들과 피해자들의 카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선원들의 업무상 과실 및 도피 등에 관한 증거로 활용하여 이들을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카톡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카톡 이용자는 현재 4000만명, 하루 평균 메시지는 55억건에 이른다. 하지만 막대한 양의 메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뿐 아니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수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수사에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청(통신제한조치) 영장은 지난 2010년 107건, 지난해 161건이 발부되는 등 한 해 평균 100건 안팎에 불과하다. 죄명도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성폭행 등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다. 지난해 3월 국정원은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개국 연계된 전모씨를 붙잡았다. 국정원이 카톡 감청을 통해 전씨가 일본에서 상부선 박모씨와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논란과 달리 흉악범과 간첩 등에 한해 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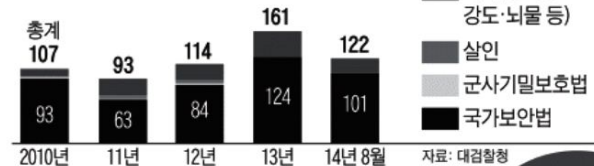
재력가 청부 살인, 세월호...
급작한 사건에 결정적 단서로
감청 영장 年 100건 안팎
국보법 위반·살인·성범죄 등
극히 제한적 경우에 발부

일부만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수사에 카톡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흉악범이나 간첩을 잡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카톡 가입자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급증하면서 해외 도피 사범들도 카톡으로 덩미가 잡힌다.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에서 D(44)씨는 상가 임대인을 살해하고 다음 날 캐나다로 도피했다. D씨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했지만 경찰이 그가 캐나다에서 가입한 카톡 계정을 통해 현지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캐나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붙잡을 수 있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 효율성을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발부 현황



카카오톡
논란
진실은?

Q. 전 국민 실시간 감시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국내 이용자 4000만명, 1일 평균 메시지 전송량 55억건에 달하는 데다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음

Q. 그동안 카카오톡에 대해 감청영장 집행하면 무엇이 어떻게 넓어졌나?

A. 미리 지정된 대상자가 누구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3~7일 단위로 다음카카오톡이 모아져 수사기관에 전달

Q. 앞으로 감청영장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어떻게 확보하나?

A.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후에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된 대화 내용 확보 가능. 하지만 서버 저장 기간(2~3일)이 지난 메시지는 확보 불가능

Q. ‘암호화 기술’ ‘프라이버시 모드’ 등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 이용하면?

A.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암호키(암호를 푸는 열쇠 소프트웨어)’를 함께 받으면 대화 내용 확보 가능. 해외 메신저 서비스도 사법 공조 통해 확보 가능

Q. 카카오톡 서버 저장 기간이 지나거나 사법 공조가 안 되면?

A. 수사기관이 피의자 스마트폰 압수해서 분석하면 저장 기간이 지나거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도 대화 내용 확보 가능. 피의자가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구 가능

위해 카톡 증거는 꼭 필요하다”며 “최근 ‘사이버 감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강력범이나 뇌물 사범, 간첩

수사에 활용되는 카톡 감청과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석남준 기자

“무분별 감찰은 사생활 해치고 토종기업 생존까지 위협”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가 16일 고등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 대표의 입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청영장 불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가 초점이 됐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논란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포털업체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가 발단이 됐다. 당시 검찰은 사이버사 허위 사실 유포 대응방안으로 ‘선제적 대응 필요’를 발표했고, 이 때문에 수사대상이 전방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즈음부터 사이버 망명 사태가 시작됐다. 사이버 망명 행렬이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시대 진입으로 어렵게 일궈낸 사이버 생태계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커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쟁점 사안을 짚어봤다.

정부의 사이버 감찰, 어디까지?

국가 안보·치안 위해서라면
인터넷 감청도 예외될 수 없어
사생활 노출 어느정도 감수해야

국민을 잠정적 범죄대상 규정
중대 범죄 등 범위 제한 필요
시대에 맞게 영장 발부 고민을

법조인들은 정부의 감청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카톡 사태가 불거지긴 했지만 국가 안보와 치안을 위해 감청은 필요한 조치”라며 “인터넷도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몇 년새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정보의 이동이 음성에서 텍스트와 영상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감청의 대상도 단순히 통화에만 머물지 않고 메시지를 포함한 인터넷 통신수단으로 확대된 것은 미국 등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다만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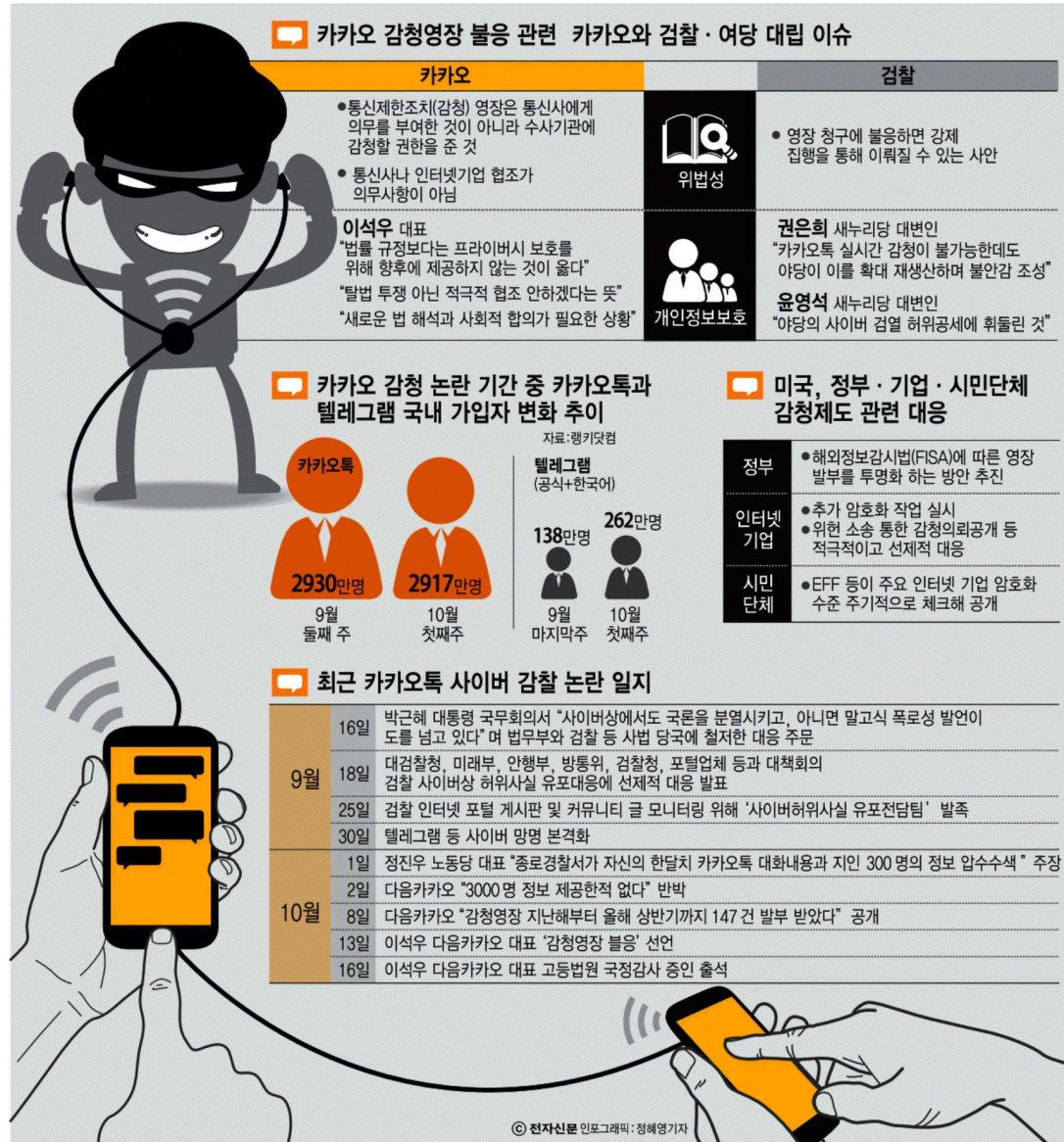
이 변호사는 “법의 집행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3000명 사찰 공방에서도 제기됐듯 기존 전화 등 일대일 통신수단과

는 달리 메신저는 다자간 통신방식이어서 개인의 사생활 노출 범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신저 등 신종 통신수단 감청에 검찰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에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기관도 정보 접근 가능성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춰 법원도 영장 발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감청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청의 대상은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넘어서는 범위에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이버감찰에 대해선 일반 국민을 잠정적 범죄 대상으로 규정하고 취하는 조치인 만큼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석우, 법 지킨다면서 “감청영장 협조하지 않겠다”

〈다음카카오 대표〉

법사위 참고인으로 나와 또 거부
“장비 개발돼도 자료 안 줄 것” 버텨
검찰 “과거 영장집행 방식 적법”

이석우(48·사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의 참고인으로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 13일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언한 배경과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며칠 전 “감옥 가더라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의미냐.

▶이석우 대표=법은 앞으로도 지키겠다. 과거의 방식을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할 때는 미래 시점의 송수신 내역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대표=과거엔 그렇게 해석해 3~7일치씩 모아 제공했지만 프라이버시 우려가

불거진 10월 7일 이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실시간 감청장비를 서버에 부착해 감청하는 것이어서 과거처럼 협조할 순 없다”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실시간 감청설비가 없느냐’고 묻자 “감청장비가 없기도 하고 함부로 도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통비법은 과거 유선전화 때 만들어진 법이다. 법적·제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감청설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2005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이후 국회에 제출된 통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감청) 소프트웨어가 개발돼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자 “향후 어떤 장비가 개발돼도 (카톡 대화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나 27일 미래부 국감 중 한 곳에 참고인으로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검찰은 미래 시점의 영장을 제시하

고 사후 기록을 가져오는 감청방식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기관이 기술적 문제로 통신사에 감청영장 집행을 위탁할 때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게 아니라 미래 시점의 전기통신 내용을 달라는 것”이라며 “통신사가 이를 3~7일씩 모아 보내 준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과거 방식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게임업체들 수사 전용 사이트 개설”=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업체가 수사기관에 고객정보를 주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엔씨소프트의 ‘CRIN(NCSOFT for Criminal Investigators)’ 사이트 화면을 보여 주며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 전용 사이트에서 리니지 등 게임 이용자들의 로그인 기록을 빼 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엔씨 측은 “언급된 사이트는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넷마블 측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jipol@joongang.co.kr

▶ 관계기사 B1면



보안이나 편의냐? 한번에 잡을 카드 찾아라

카드 고객정보 유출후 9개월 ⑥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카드업계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른바 '천송이코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결제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보안과 편의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번 고객정보 유출이 단순 사고가 아닌 '인재'라는 측면에서 인력관리도 장기 과제로 남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새변수로... 인력관리도 숙제

◇“보안이나, 편의냐” 고민 커진 카드업계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로 보안에 '울인' 하다시피해온 카드업계에 최근 간편결제서비스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PG사(전자결제대행업체)가 카드정보를 직접 저장해 원클릭 간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다.

고객 입장에서는 결제의 편의성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정보유출과 금융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게 문제다. 정보유출이 가능한 경로가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불안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자본 400억원 넘는 PG사는 'PCI DSS인증' 등 보안기준을 갖추면 신용카드사처럼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해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면 PG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민원이나 여론의 화살이 결국 카드사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편결제서비스 확대에 동참하는 마음이 편치 않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결제 서비스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며 “카드사들이 언제까지

보안을 핑계로 기존 사업영역을 방어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비금융기관과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보안과 편의성의 접점을 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업계가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승우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자결제 정책이 급변함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나 결제사업자가 결제자에게 보안책임을 지게 하는 전자서명 등의 사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보안과 리스크를 사후대응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가 만사” 인력관리 장기과제
1억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는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한 명의 ‘손’에 의해 발생했다. 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개선작업을 위해 카드사로

파견된 이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통해 개인정보 실패데이터를 USB로 절취한 것이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는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때 지켜야 할 보안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 복합적인 ‘인재’인 셈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력관리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사고 이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교육을 강화했지만 이와 별개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카드사 관계자는 “보안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사람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검증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그저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며 넘길 수도 없는 문제라 장기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

4년간 사이버범죄 50만여건 정작 검거율은 55.4% 수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이버 범죄가 50만3452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55.4%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이버 범죄 건수는 15만53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4만7000건 더 발생했다.

민 의원은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81%에서 2013년에는 4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음 기자

아주경제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02면 종합

유출 공인인증서 1만5376건… “피싱·해킹 원인”

피싱 및 해킹 등으로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지난 8월 말 현재 1만5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출에 따른 폐기건수는 2011년 15건, 2012년 8건에서 지난해 5871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서도 급증했다.

금융기관별로는 농협은행이 3946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365건, 2089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도 1540건으로 공인인증서 유출에 따른 폐기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1423건, 739건에 달한 바 있다.

김태환 의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최근 급증한 파밍, 스미싱 공격을 꼽았다.

문지훈 기자

한·중·일 ‘사이버 안보’ 공조

中, APEC 정상회담 앞두고 제안 21일 베이징서 실무급 회담 진행

‘사이버 안보’에 대한 한·중·일 삼국 간 협력 방안이 공식 논의된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급 회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본 측 대표로는 코노 외무성 사이버 정책 담당 대사가 참석한다. 내각관방정보보안센터(NISC)와 총무성, 방위성 등의 실무자도 배석한다.

3국은 지난 2008년 12월 열린 첫 정상 회담에서 사이버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촉발된 한일 간 역사 문제와 중일 간 영토 문제 등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이번 논의는 중국 측이 제일 먼저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 회담을 앞두

고 있는 중국이 이에 앞서 다자간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제스처라는 게 일본 언론의 시각이다.

일본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경계심이 강하다. 일본의 종전기념일(8월 15일)이나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포일(9월 11일) 등 역사나 영토와 관계있는 시기에 일본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사이버 공격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들 공격의 발신지가 중국으로 추정됐지만 일본 정부는 외교관계를 의식해 지금까지 공식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따라서 일본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양국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련 대화를 정례화하고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개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 3국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디지털타임스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02면 종합

웹하드 등록제 ‘있으나 마나’

불법복제물 유통 심각한 수준

음란물 업로드 하루평균 5100여건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웹하드에서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저작권문화발전연구소는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국내 최대 웹하드 위드스퀘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를 조사한 결과 평일 평균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는 시간 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 낮에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주말동안 올라온 음란물은 11만건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 촬영 음란물 영상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산 개인 음란물 영상이

올라오면 네티즌들이 집요하게 영상 속 인물을 추적하여 끝내 이름, 나이, 학교 등을 밝혀내고, 이를 영상과 함께 다시 웹하드에 게시한다.

또 연구소는 웹하드에서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의 유통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웹하드 등록제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콘텐츠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웹하드에서의 5년 동안의 불법복제물 유통 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은 7억 6000만 개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인 2011년 7억3000만 개보다 3000만 개 증가했다. 연구소측은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포함한 저작권 관련 업체들도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규모 소송과 입법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정보통신 **미래모임**

국내 클라우드 산업 현황과 미래

여러 국가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정보기술(IT) 인프라 활용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타워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다. 데스크톱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기기에서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 속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내려받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들과 인식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산업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224회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관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제시했다.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열렸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클라우드로 확보한 IT자산, 창의적인 R&D에 재투자해야”

참석자

<주제발표>

- 송희경 클라우드산업협회장

<패널>

- 김명호 한국MS CTO
-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
- 최백준 딜론 대표

주제발표 **송희경** 협회장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가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IT 인프라를 빌려 쓴다는 것은 클라우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개념입니다.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희경 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IT의 발달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프레시를 사례로 든 송회장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우유가 떨어졌다면 이를 비코드로 찍어 아마존과 연결해 자동 결제하면 3분 안에 우유가 배달되는 시대가 왔다”며 “창의적인 서비스가 넘쳐나고 관련 데이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시에 가치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IT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홍수 시대, 쏟아지는 데이터 가운데 가치 있는 정보는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기존 IT 인프라로는 이런 빅데이터를 쉽게 수집·분석·전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송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서비스제공 기업이 모두 데이터센터에 갖추고 IT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고 서비스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클라우드를 통해 많은 자원을 ‘구름 속(백그라운드)’에 두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클라

도입 성공사례 만드는 확산기 진입 서비스 모델 개선해 성장발전 마련 전문인력 키워 외산 의존 탈피해야 클라우드 발전법 현실에 맞게 손질

우드를 통해 확보한 IT 자산과 시간, 예산 등을 좀 더 창의적인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송 회장의 생각이다.

이미 많은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이 클라우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아마존은 아마존웹서비스(AWS)로 글로벌 인프라형서비스(Ia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3년마다 50%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는 정책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소 사업자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애저 서비스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아마존과 최자가 경쟁에 나섰다. 플랫폼형서비스(PaaS)부터 IaaS까지 차세대 동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금융과 공공 등에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클라우드 성장기’를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현한 ‘관망기’를 지나 도입 성공사례를 만드는 ‘확산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송 회장은



“클라우드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거품이 사라지고 실제 사업자출 규모가 확산되고 트렌드로 자리잡는 성장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과 기술, 인력 생태계를 재조정해 성장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IaaS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이 참여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사

용자에게 전달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PaaS 시장은 미미한 실정이다. 송 회장은 “클라우드 기술도 국내 사업자가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외산 플랫폼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국산 SW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인력 역량도 강화하면서 외산 솔루션 의존도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발전법도 문제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공·민간·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보보호 등 국내에서 민감한 이슈 때문에 ‘발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송 회장은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규정은 현실과 괴리된 보안정책으로 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경제성을 잃을 수 있다”며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기준을 확립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에서 공공 클라우드를 통해 정부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송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안정된 전원공급, 적절한 가격, IDC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나라도 드물다”며 “아시아 최고의 IT 컴퓨팅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강국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W를 통한 서비스 창조,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으로 사업자, 공급자, 사용자 가치를 확대한다면 클라우드 사업은 충분히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ikwon@etnews.com

김명호 CTO “보안문제 유연하게 접근해야”
 이강수 부사장 “SW산업의 활력소 역할할 것”
 최백준 대표 “공공 분야 적극적 도입 필요”

패널발표

‘클라우드 보안 정책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발의된 지 1년째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안 규정과 관련 국가정보원 개입 등 이슈로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김명호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임원(CTO)은 “클라우드 보안 문제를 ‘OX(All or Nothing)’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CTO는 “기존 인프라들이 100% 안전했는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도 정전이 있고 수도, 교통 인프라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육성해 신뢰도를 쌓는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주 보는 책은 언제나 손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잘 안 보는 책은 책장에 꽂혀 있게 마련이다. 김 CTO는 “클라우드의 미래는 퍼블릭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데이터를 분류해 맡겨도 좋은 데이터와 스스로 보존해야 할 데이터를 유연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자자원관리(ERP)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는 더존비즈온의 이강수 부사장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활로를 클라우드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마켓3.0 시대를 맞아 고객이 원하는 ERP



김명호 CTO



이강수 부사장



최백준 대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클라우드였다”고 말했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은행거래 등이 모두 전자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는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IT 인프라를 확충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 부사장은 “고객사 가운데 IT 담당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며 “이를 클라우드 형태로 직접 서비스해주는 방식으로 고객의 어려움을 해

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가 클라우드 전담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백준 톨론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IT 전체 시장의 정부 조달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공공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면 정부 조달의 투명성 및 신속성 확보뿐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미래 제언

“다면적 기술의 총아 특정산업 제한 안 돼”

최근 20년 가까이 클라우드 만큼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분산 컴퓨팅, ASP, SaaS 등 늘어나는 정보와 소프트웨어(SW)의 효율적인 저장과 사용 측면에는 사실상 다른 대안



이 없어서인 것 같다. 이번 미래모임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의 현상과 발전으로 주제의 초점을 맞췄고 발표자와 패널도 산업적 관점에 주안해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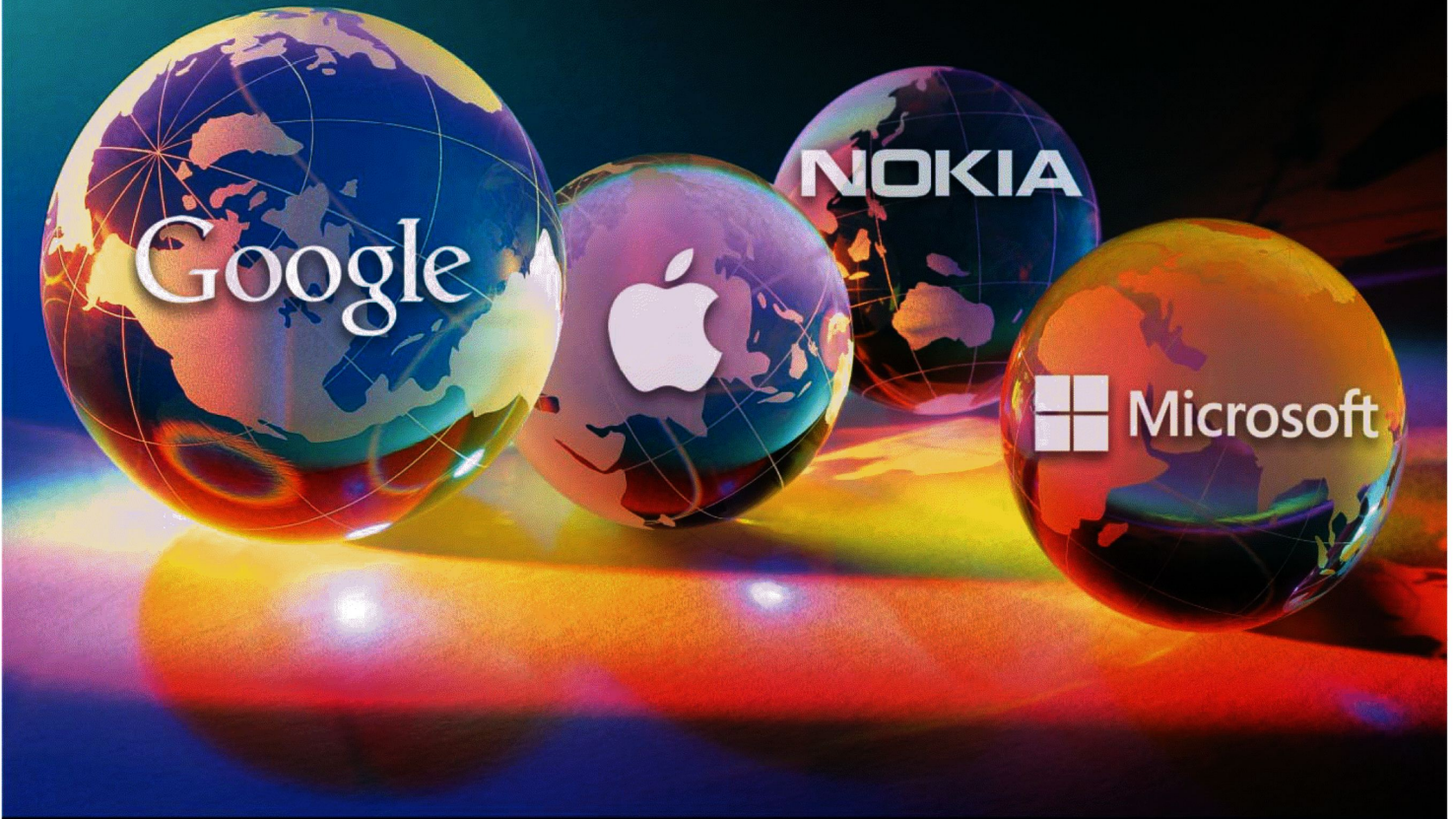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클라우드를 특정기술 특정산업으로 보는 제한된 시각이 문제라는 것에 대다수 동조했다. 대표적인 다면적 기술의 총아로 봐야 함은 물론이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 중 경로의존성이 무척 크다는 것이다.

이미 클라우드 생태계의 길목길목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글로벌 업체와 무모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인터넷 인프라 우수성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강점을 활용해 그들과 통 큰 전략적 연계나 ‘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정책도 요긴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밀도 있고 긴장감 있는 토론이었던 만큼, 이러한 의견과 대안이 정책 입안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미래모임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손바닥으로 우리 머리 위를 뒤덮어가고 있는 구름을 가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밀려드는 자리였다.

임춘성 미래 모임 회장

구글맵 천하에 맞선다... 地圖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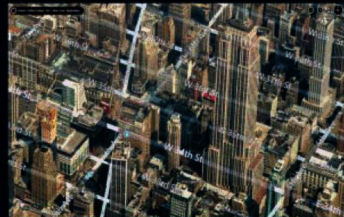
'공간 정보'는 모바일 사업 성패의 핵심... 구글의 독주에 애플·MS·노키아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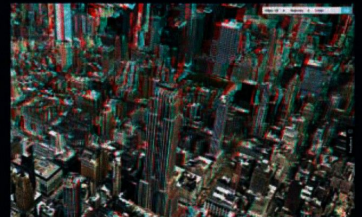
구글 스트리트뷰
구글맵이 제공하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스트리트뷰



애플 플라이오버
미국 내 유명 건물들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3차원 플라이오버(fly over) 뷰를 제공하는 애플 맵



MS 버추얼어스
하늘에서 찍은 '버즈 아이뷰(bird's eye view)' 사진에 동서남북 거리명을 촘촘하게 표시한 MS 지도



노키아 히어(3D glasses 모드)
적경 안경을 쓰면 입체로 보이는 노키아의 3D 지도

삼성전자는 곧 출시할 신형 스마트워치 '기어 S'에 노키아의 전자 지도(地圖) 앱(응용프로그램)인 '히어맵(Here map)'을 탑재할 예정이다. 노키아 지도는 국내에선 서비스가 안 되지만, 해외시장에선 '구글맵(Google map)'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도 중 하나다. 이미 유럽에서 구글 지도의 대항마로 통한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의 80%에는 히어맵이 들어간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다. 업계에선 구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에 노키아 지도를 채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함께 지도는 순식간에 손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까지 이 시장의 최강자는 구글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엔텔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54%가 구글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IT 거인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도 자체적으로 전자 지도를 개발하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하며 이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지도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 천하(天下)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내게 가까울수록 더 유용해지는 정보

모바일 환경에서 모든 정보는 공간(위치)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 소위 '정보의 공간화'다. 이는 모바일 광고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富)의 미래'에서 "앞으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다.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으며, 나와 관계있는 장소 또는 관심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정보가 더 중요한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정보 중에서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를 지도 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전자 지도인 것이다.

공간 정보가 더해진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바일 IT(정보기술) 생태계의 핵심 동력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스타벅스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스타벅스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갖는 식이다.

우리의 생활 전반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모

구글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54% 장악
해저·우주까지 지도 영역 확장 중

애플
미국 시장 30%를 야금야금 점유
자동차 위치찾기 등 편의 기능 보강

노키아
美·유럽 차량 80%에 노키아의 '히어맵'

MS
2005년부터 '빙맵' 꾸준히 업그레이드



연세대 허준 교수

바일화(化)하고 있다. 프랑스 광고업체인 크리에오는 올 1분기에 발생한 전자상거래의 66%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실내외를 아우르는 3차원 지도의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보의 공간화가 구현돼 훨씬 정확한 위치 기반의 맞춤형 광고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이 지도 전쟁을 벌이는 이유

요즘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스톱 샵(One-stop shop)' 구축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해 자기만의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생태계 구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지도다. 구글은 2005년 5월 구글 지도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해저와 우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왔다.

애플은 2012년 9월 자체 지도를 아이폰에 기본 앱으로 장착했다가 지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정도였다.

그러나 애플 지도는 꾸준한 투자 속에 성능을

개선하며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 9월 기준으로 점유율 30%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8일 공개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8'에는 정확도가 훨씬 향상된 지도가 탑재됐다. 자신의 자동차 위치 파악과 같은 사용자의 편의 기능도 보강됐다. 미국 시장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애플은 앞으로 전 세계 지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MS 역시 2005년부터 구축해온 '빙맵(Bing map)'을 갖고 있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체 휴대폰을 갖게 됐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4를 공개하던 날, MS는 신형 스마트폰 '루미아' 3종을 공개했다. 재미있는 것은 루미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지도인 '빙맵' 대신에 노키아의 지도를 기본으로 탑재한 점이다. 조만간 빙맵과 노키아의 히어맵이 결집한 또 다른 지도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허준·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신동훈 기자

▶'地圖 전쟁' C7면에 계속

구글맵 천하에 맞선다... 地圖 전쟁 C1면에서 계속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강자' 아마존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아마존은 올 7월 자체 운영체제를 갖춘 '파이어폰'을 출시했다. 여기에는 아마존이 2012년 인수한 3차원 지도 제작업체 '업넥스트'가 만든 지도 앱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지도도를 통한 모바일 IT생태계 구축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담은 그릇으로서 운영체제(OS)가 중요하듯이, 앞으로는 넘쳐나는 정보를 담은 그릇으로 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애플과 구글, MS, 노키아, 아마존 등이 글로벌 '지도 대전(大戰)'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IT기업들은 중국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벌써부터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IT기기 제조업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직접 모바일 IT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글과 겨뤄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남아 있는 지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도 업체들을 무서운 속도로 합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17면 기획시리즈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 민간기업으로 나갔다 화려하게 컴백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유영환 정통부 장관

복음이 한줄 켜인 2007년 9월 4일 화요일. 정보통신부 마지막 수장(首長)인 유영환 장관(현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 정통부 1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노무현정부의 6개월 시험부 장관이라는 수명을 안고 출발했다. 이듬해 2월 말 차기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1급 안 거친 국장 출신으로 차관·장관 영전 전임 노준형 장관과 행시 동기로 공합 맞아 차관엔 정통부 터줏대감 김동수 본부장 임명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정책은 국민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역점을 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IT 발전 방향을 의제화해 차기 정부에 이양하는 데 전념하고자 한다"면서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적극 대응 △통신규제 로드맵 마무리 △IT839 상용 서비스 정착 △정보보호 역기능에 강력 대응 △국가간 IT협력 △우정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정부부 직원들에게 "그 어는 때보다 공직자의 엄격한 책임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변화기를 틈타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출석기와 조직의 인화를 해치는 판 가르기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향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유 장관은 고려대 경영대를 졸업한 후 제21회 행정고시에 최연소자로 합격해 1978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정통부로 옮겨 기획총괄과장, 정보기반심의관, 공보관, 국제협력과장, 정보통신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정책국장 당시 IT839전략을 수립하

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4년 1월 부처 간 국장급 인사교류제 도입에 따라 1년여 동안 산업자원부 산하 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했다.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자리에는 산자부 최준영 국장(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역임)이 이동했다.

그러나 얼마가던 유 국장에겐 시련이 닥쳤다. 정통부보 부귀했지만 보직이 여의지 않자 그는 사표를 내고 2005년 2월 동원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운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人生塞翁之馬)였다. 그는 2007년 9월 4일 민간기업 경영진에서 정통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정통부에서 1급을 거치지 않고 국장 출신이 차관에 발탁된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더욱이 당시 정통부 본부에는 행시 21회 동기인 석호의 실장(현 통일IT포럼 회장)과 이성욱 실장(현 국정보안산업협력 부회장 역임) 등 1급이 두 명이나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정통부 내 고시 동기를 제치고 민간기업에 나가있던 유 차관이 발탁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노준형 장관(현 김연장 고문)의 강력한 추천 덕분이었다.

차관 발탁과 관련, 노준형 전 장관의 회고, "석 실장이나 이 실장 모두 인품이나 능력 면에서 훌륭한 분입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석호의 실장을 차관으로



2007년 9월 4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식 후 기관장 및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신로망)

강력히 추천하는 전임 장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의 보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한미 FTA, 조세개편 등 다른 부처와 협상력이 필요해 유 차관을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

노 전 장관과 유 장관은 고시 21회 동기로 기획원 시절부터 트레이닝을 같이 받았고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한 사이였다. 노 전 장관과 유 장관은 실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공합이 잘 맞았다. 노 전 장관은 자신의 후임으로 유 차관을 추천했다.

전 장관의 계속된 증언, "후임 장관으로 유 차관을 추천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선 강단있고 논리 싸움에 지지 않는 데다 유 차관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17대 대통령 역임)와 대학 동문이어서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정부 IT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잘 마무리 할 책임자로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인사가 바람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8월 8일 사의를 표명한 노준형 장관의 후임에 유영환 차관을 내정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통부 장관은 국회(현 김연장 고문)의 강력한 추천 덕분이었다."

그해 8월 30일 오전 10시, 유영환 차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통부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청문회는 임인배 과기정위위원장(현

안양대 산학협력부총장)의 개회선언과 유 장관 내정자의 인사, 모두 발언,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 순으로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유 장관 내정자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발시켜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재관 매입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관 매입을 도입하려는 것도 통신시장 도매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9월 3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차관이 장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공식인 차관에는 김동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김 차관은 8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 차관의 증언, "차관 내정은 유영환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노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김 차관은 취임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통신규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자"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포털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IT839 전략을 마무리하는 일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신임 김 차관은 청주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 정통문화에 출석해 정통부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청문회는 임인배 과기정위위원장(현

장 등 정보통신 관련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정보통신진흥(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절 3년여 정보통신진흥 고속인터넷과 IMT2000 등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과 활성화, 한미 통신 협상과 한-EU 통신장비 조달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전대제 장관(현 스카이라이프네트웍스 대표) 시절 3년여 정보통신진흥 국장으로 일해 장수 국장이란 기록을 남겼다.

그해 9월 17일, 정통부는 차관 승진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공석인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현 LG유플러스 부사장), 미래정보전략본부장에는 강대경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현 SK텔레콤 고문)을 각각 임명했다.

또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에는 이기주 전파방송기획단장(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보통신정책본부장에는 설정선 정보통신협력본부장(현 한국통신사 입자연합회 부회장), 정보통신협력본부장에는 김대희 주미대사관 참사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파방송기획단장에는 송유중 재정기획관(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 무렵 정통부는 이미 대선 체제로 접어들었다.

나라당은 그해 8월 20일 정당대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17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보다 늦은 그해 10월 15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그해 11월 1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해 11월 21일, 참여정부 '전자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가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유영환 정통부 장관과 염동연(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역임), 정동채(문화관광부 장관 역임, 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대통령임진상당 국회의원,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주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통부의 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의 하나로 2458억원이 투입됐다. 부지 4만2700㎡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만3696㎡ 건물에 각 부처의 서버 1555대를 비롯해 3500여대의 전산장비를 완비해 완벽한 보안체계를 구축했다.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대선 소재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지 않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법무부·국세청 등 24개 중앙부처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했다. 2006년 2월에 착공해 연인원 12만여명이 동원돼 2007년 6월 완공했다.

한 해가 지나는 12월 16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지상파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한국 기술의 쾌거였다. 지상파DMB는 그해 5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 방송연구연에서 만장일치로 표준안으로 채택된 후 191개 회원국 회람을 거쳐 12월 15일 새버 ITU 국제표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DMB는 우리 방송기술로 최초로 2005년 7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표준 채택에 이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개가를 올렸다.

당시 우리나라 지상파DMB 단말기는 780만대가 보급됐고 독일, 바티칸, 이탈리아, 가나,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11개국에서 실험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통부를 향한 최악의 먹구름이 마치 대풍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정부조직개편이었다. 정통부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 최종 결정권자는 미래전략인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IT칼럼니스트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비사를 묶은 책 '대통령과 정보통신부'가 출간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노트북을 열며

김영훈

경제부문 차장

#1. 미국 대학의 한국 교수가 물었다. 미국 학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적 성취를 하는 이유를 아느냐고. 국력과 영어의 힘이라고 답했다. 한국 교수가 미국 교수보다 무능해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답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부심입니다. 나의 연구가 인류의 지혜를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자부심이지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가 부연했다. “미국에 살아서 생긴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미국과 다른 나라 학자를 가르치는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학자는 내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 최초의 개척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잘 났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눈높이와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 결승을 ‘미국 시리즈’가 아닌 ‘월드 시리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척자로서 인류에 대한 기여 같은 생각은 못했습니다.”

#2. 인기 인문학 강사인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후 온 나라가 안전 문제에 촉각이 곤두섰을 때 발생한 지하철 사고를 언급했다. “저는 이런 사고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사고가 나면 매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준비, 훈련 부족 아닙니까. 그런

데 왜 매번 안 될까요.” 매뉴얼 부재 등의 말이 머리를 맴돌았다. 최 교수의 답은 달랐다.

“준비와 훈련 모두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대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창의·전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것에 맞춰 일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식 밖에 있습니다. 선진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품을 보세요. 우리가 만든 것은 있어도, 우리가 처음 만든 것이 있는지요.”

#3. 법이 시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사달이 났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말이다. 목소리 큰 소비자는 혜택이 줄었다고 분통이다. 한쪽에선 중저가폰을 쓰는 소비자의 혜택이 늘었다고 항변한다. 단말기 제조회사와 이동통신 3사의 이해도 갈린다. 시장에 말기자는 주장과 과도기이니 보완하자는 의견이 맞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단통법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법이다. 정보기술의 맨 앞줄에 있다 보니 베길 참고서도, 준용할 기준도 없는 상태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처음 해 본 일에서 우리 실력이 드러나고 말았다. 좋은 법, 나쁜 법을 따지기 전에 아쉬운 게 이 대목이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열심히 쫓아가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걸 이제 다 안다. 중국이 으르렁대는 통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다. 도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생존의 문제다. 자문한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해안과 역량을 가졌을까. 단통법 혼란은 그저 단통법만의 문제이길 바란다.

이구순의 느린 걸음



정보미디어부장

알아서 불편해진 보조금의 진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용도 어렵고 이름도 어려운 이 법 얘기로 온 국민의 술자리, 밥자리 뒷담화가 분분하다. 뒷담화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정말 소비자가 휴대폰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걸까?

예를 들어보자. 이동통신 회사가 한 달 5만5000원씩 요금을 내겠다고 2년간 약정을 맺는 소비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2년간 총 132만원짜리 고객을 유치하려는데 고객이 부담할 휴대폰 값 100만원이 고민이다. 소비자가 한 번에 덜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워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을 망설인다.

그렇다고 휴대폰도 없는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팔아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때 이동통신회사가 내미는 밑밥이 휴대폰 보조금이다. 이동통신 회사는 134만원을 벌기 위해 소비자의 휴대폰 값 50

만원을 미리 내주겠다고 나선다. 미리 내주는 그 50만원 안에는 소비자가 매월 1만원 남짓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요금할인 24만원 남짓이 포함된다. 또 소비자가 낱개로 살 때 100만원인 휴대폰 값을 이동통신 회사는 200만대 이상 팔아주겠다고 10만원 남짓 깎아서 사온다. 결국 이동통신 회사는 보조금을 50만원으로 포장했지만 자신이 부담하는 돈은 정작 16만원 남짓이다. 16만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132만원짜리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단통법은 과거 포장으로 가려져 있던 보조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법이다. 요금할인이 얼마인지, 이동통신 회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쓸 것인지 인터넷에 공시하라는 것이다. 공시를 해놓고 보니 이동통신 회사들의 보조금 수준은 10만원 선.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아닌 셈이다. 정작 이 내용을 알고 난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보조금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소비자로서 보조금의 실체를 알고 나니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실

체는 가린 채 포장만 키워 있지도 않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겠다고 고집부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내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고깃간 주인의 자비심이 아닌 이기심 때문이다.” 대학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기자 초년병 시절 강한 충격을 받은 말이다. 나는 고깃집 아저씨가 착하기 때문에 내게 좋은 고기를 주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내가 늘 그 집에서 고기를 사고 굳이 값을 깎아달라고 조르지 않도록 좋은 고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업을 경쟁시키는 것이다. 이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통법이 보조금의 실체를 알려줬으니 소비자는 이제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 보조금 많이 주는 이동통신회사와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찾아나서는 것이 이동통신 회사의 이기심을 제대로 자극하는 것이다.

cafe9@fnnews.com

광학문

휴대폰 보조금 내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이른바 '호갱' (어수룩한 고객)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법 시행 보름 만에 개정 내지는 폐지 논의가 시작된 이 법안이 통과된 건 지난 5월 2일.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던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76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단통법은 21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 2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상민·최민희 두 의원만 기권했다. 단통법 관할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기권을 택한 이유를 물었다.(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법안을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는 답이

김준형
부국장/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이쯤해서 의원들이 평소 법안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지 의문이 든다.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발의서에 도장을 찍게 돼 있으니 최소한 이들은 법안내용을 잘 알고 있으려니, 하지만 그것도 아닌 듯하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였던 새누리당 강기운 의원의 경우 며칠 전 "나는 법안 내용을 몰랐다"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본회의장 의원석에 놓인 단말기에는 법안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그걸 읽어보는 의원은 거의 없

어보인다.

의원님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돌아왔다. '벼락치기'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100개 넘는 법안이 논의되는 중에 최종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도 없으면 차마 찬성할 수 없어서 기권했다는 것이 다.

법 통과 이전 단통법이 '논의'된 것은 지난해 12월23일 미방위 법안소위원회가 전부다. 그나마 여야 대립으로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속기록에 나타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보조금 분리 공시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등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만 맞춰졌다. 공동발의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조차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파장이 클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15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명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하지만 단통법 개정을 위해 모임을 만든 19명도 면면을 살펴보면 10명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사과라도 한 마디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게 맞아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상대방이 읽었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러시아 메신저 텔레그램은 상대방이 몇 시에 읽었는지, 최종 접속시간이 언제인지까지 나온다.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고 보면 '읽음' 표시기능 하나쯤은 집어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표결 전 의원이 한 번이라도 읽었는지를 국민들이 검열하게 하면 '제2의 단통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단통법은 명백한 '입법 실패'며 이로 인한 금전적·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만 돌을 던지려니 쪼뼛하다. '시장 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된다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작해서 낸 '입법 실패'는 유권자와 미디어박연 개입할 주체가 없다. 입법과정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이런 '입법비용'을 우리가 또 치러야 한다는 걸 유권자와 미디어가 실감했다면, 그래도 중요한 거 하나는 건진 거라고 위안을 삼자.

navido@

머니투데이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08면 오피니언

"700MHz, 지상파 쥐라" 국감의 갑질?

"계속 갑(甲)질할 겁니까" "미래부 때문에 식물 상임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질책이 쏟아졌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질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다. 주파수 700MHz(메가헤르츠)대역을 '지상파방송사'에 할당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왜 주파수 700MHz를 지상파에 할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의원은 드물었다. 한 야당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니까 공익적인 성격의 지상파에 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지상파가 공익적인 역할을 못 한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700MHz대역 108MHz폭의 할당안은 논의 중이다. 정부는 2012년 40MHz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했다. 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20MHz폭은 재난망으로 할당하는 안을 정해 현재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뒀다. 그럴 경우 48MHz폭이 남는데 지상파들은 이걸로는 UHD(초고선명)방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용 할당을 없던 일로 하고 지상파에 배정하라는 게 지상파의 일관된 주장이고, 의원들은 지상파의 목

소리를 대변했다.

UHD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에 공짜로 700MHz를 할당해 UHD방송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는 7%대에 불과하다. UHD TV 가격도 몇백만 원인 상황에서 UHD방송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통신용으로 배정하면 조단위의 주파수 할당료를 받아 재난망 구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파수 할당으로 트래픽 증가 등에 대비하는 것이 공공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2012년에 통신용으로 결정한 사안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내리라고 주무부처 수장을 대놓고 압박하는 게 맞는 건지, 20년도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을 지상파 편들기에만 상당부분 사용했다면 국회의원들이 소위 '갑질'을 넘어 직무유기를 한 건 아닌지 생각해볼 때다.



배규민
정보미디어과학부
bkm@

어설픈 정부가 기업 잡는다



■ 매경의 창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자성어로는 생무살인(生巫殺人)이라고 한다. 이 속담은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뜻인데, 능력이 없어서 제 구실을 못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영어에도 작은 지식이 위험한 것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불완전한 지식은 사람이나 물건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결국 이 속담들은 어떤 일에 솜씨나 기술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는 체하여 일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나 국가가 미디어 산업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추진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는 미디어 산업을 세련되게 진흥하거나 규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무당처럼 미숙하게 굴다가 여러 기업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게임규제 논란, 사이버 망명 곤욕 치르는 창조경제 핵심 산업들
국회·정부가 만들고 행하는 규제는
충분한 준비 후에 사회로 나와야**

예를 들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확산됐고, 이에 따라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증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가 발생했다.

이 와중에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가가 하락하고 네티즌의 신뢰까지 상실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카톡한다’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던 대한민국 대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검찰의 대응 방침 하나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 지급을 없애 단말기 유통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시행되자마자 역효과를 내고 있다. 우선 이 법에 반대했던 단말기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단말기 유통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저하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일부 고객에게 몰아주던 보조금을 모든 고객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만 달라졌을 뿐 딱히 좋아진 점이 없다.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 하는 대부분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 규제를 철폐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단통법으로 풀려고 했던 정부의 미숙함이 기업들과 소비자까지 잡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온라인게임 규제 역시 선무당 정치권이 온라인게임 산업을 잡는 경우다. 게임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나마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임 산업을 규제로 위축시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는 홈쇼핑 업계에 제7홈쇼핑을 허가해 공급과잉 상태를 만들려는 정책도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대선 이후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 속에서 인터넷 업계의 리더인 네이버를 규제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창조경제 핵심 산업인 미디어 산업의 주전 선수 모바일메신저 기업, 스마트폰 제조업체, 게임 회사, 홈쇼핑 기업, 인터넷 포털 등을 정부가 오히려 괴롭힌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웃기는 일이다. 정부나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미디어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핍박하는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창조경제는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무당이면 기업들이 죽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체통에 금이 가는 일이겠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선무당이었음을 반성하고 다시는 기업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책으로 촉발된 '인터넷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한 다음카카오는 큰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이탈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도 심각하다.

사건의 촉발점이 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구성과 그 대책은 법적 논리나 효과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확인하고 증거를 채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

해 삭제 요청도 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공익을 훼손할 목적성'을 가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법적 제재가 적절한가이다.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2008년 외환위기 당시의 '미네르바 사건'이 데자뷰처럼 스쳐간다. 당시 박 아무개씨는 다음 아고라에 외환보유고 문제 등을 지적한 글을 올렸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을 신설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공적 이슈를 다룬 게시글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려워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

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을 적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한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검찰이 내세운 '사이버상의 국론분열'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당시 4명의 헌법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이 아니다.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 내기 어렵다. 지금은 거짓으로 인식되지만 나중에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즉, 허위성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기간에 허위 여부를 검증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인지수사를 하는 것도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주관적 명예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제3자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개인간 법익 침해는 '신고 후 삭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임시조치 제도이다. 이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신고하면 즉각 삭제에 준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행정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를 통해 유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인터

넷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친 게시물 삭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인터넷은 특정 국가의 규율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적 정보망이다. 국가 규제의 한계는 많은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규제가 범세계적인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의 한정위헌 결정에서 인터넷에 대한 국가 규제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 안 된다"는 중요한 문구를 남겼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부가 언제까지 휴대전화 요금 못 내리게 막을 건가

휴대전화 보조금(補助金)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나면서 여러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소비자들에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소비자들이 값이 오른 휴대전화를 외면하자 제조업체와 대리점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법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신규 가입자는 하루 평균 1만4000명으로 지난달보다 58%나 줄었다. 대신 중고폰이나 값싼 외국산으로 옮기는 고객들이 많다. 새로 도입된 보조금 규제로 시장 혼란은 가속화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원래 가계(家計)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보조금을 절감하게 된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

하 경쟁에 나섰다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이들이 꼼짝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을 인가(認可)하며 사실상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 인가제는 시장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마구 내려 후발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1991년 도입한 것이다. 이제 후발 사업자인 KT·LG유플러스는 한 해 수천억원씩 영업이익을 낼 만큼 컸다. 더 이상 후발 통신사 보호를 위해 요금을 정부가 통제할 명분이 사라졌다. 인가제를 없애면 전화요금도 평균 8.7%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외국산 중저가(中低價)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단말기를 내놓아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서울신문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31면 사설/오피니언

반발 무마 수준으로 사이버망명 못 막는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까지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한 정치공세를 그만두라며 논란 확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의 가치가 한갓 정치권의 창과 방패 싸움으로 전락하는 것인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개인정보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촉발된 것은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적발 방침을 세우면서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자 곧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단죄하겠다고 설익은 수

사강화 방침을 내놓아 분란을 자초했으니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공할 듯하다. 검찰은 기술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실시간 감청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청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영장에 불응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급박한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모바일 기업이 법치에 대한 저항을 공공연히 밝힌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

순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다분히 ‘선언적’인 폭탄발언을 하기 전에 고객의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저장기간을 줄이는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사이버 검열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카카오톡 위법 또한 안 된다는 게 여론이다.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는 악순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이버 유언비어는 우리 사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을 뿌리 뽑

아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사찰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기술적·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집행수단을 강구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의지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카카오톡 위법’ 궁극 대책 못돼 사이버 인권 공감대 형성 필요

검찰이 ‘실시간 키워드 검색’ 등 강경한 내용에서 한 발 물러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감청은 살인이나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 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실시하게 돼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최소한 범위에서 실행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범법 또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사이버 수사과 관련, 영장 발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심사를 철저히 해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검열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내 메신저 이용자 150만명이 보안성이 좋은 독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급작스러운 ‘사이버 난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해외 메신저로 떠난 이들이 다시 신뢰를 되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통법 해법은 통신요금 자유화뿐

이달 들어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온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대폭 줄어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 한다고 아우성이고 제조사와 판매점들은 판매부진에 울상이다. 마케팅비를 아끼게 된 이동통신사만 재미를 보고 있다. 그래서 단통법은 전국민을 ‘호갱(호구+고객의 비속어)’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는다.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법 취지와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드센 비난 여론에 이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치권이 가장 크게 놀란 듯하다. 몇몇 야당 의원들은 벌써 단통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나 소비자가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도 조만간 독자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단말기 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싸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 중이며 보조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가 내놓는 대안들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 든다. 휴대폰 보조금 문제의 근

본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 품질이나 서비스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 요금도 비슷비슷하다. 1996년부터 시행된 요금인가제 때문이다. 1등업체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금 승인을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여기에 맞춰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건 사실상 요금 담합이다. 요금도 서비스도 차별화되지 않으니 통신사들은 엄청난 보조금을 뿌려 타사 고객을 뺏을 수밖에 없다. 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니 통신

사들은 경쟁을 포기하고 다시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50만~60만원씩 보조금을 주던 것을 30만원 이내로

보름만에 대체입법 쏟아져 통신사간 자유경쟁 유도를

묶으라 하면 고객을 유인할 수 있겠나. 단통법이 담합을 조장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말기값과 통신요금은 서로 맞물려 책정된다. 따라서 요금을 인가제로 묶은 상태에서는 단말기값을 내리고 보조금을 올리라고 다투다 봐야 별 소용이 없다. 단통법 파동은 정책의 실패를 보여줄 뿐이다. 정답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사 간에 완전 자유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장은 최적의 가격을 찾아낼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요금구조를 유도하고 통신사들의 담합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부작용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단통법 시행 후 비싼 휴대폰 값이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단통법 시행 보름이 넘었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보조금 인상과 휴대폰 가격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선 이제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비아냥이 넘쳐나고 있다. 또 국민을 호갱님(호구 고객님)으로 만든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단통법 질타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려 단말기 구매비용만 높여놨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단통법이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없애고,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세계 유례없는 규제법 그 자체에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인하 압박정책에 따라 이통사의 모든 요금제에 대해 기본료 1000원을 인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같은 강제적 1000원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전혀 통신비 인하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했고, 결과적으로 이통사들 매출 6000억만 사라진 꼴이 됐다. 이번 정부도 이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16일 한 보수 시민단체가 이같은

단통법 논란, ‘경쟁 보장’이 옳은 해법

“단말기값을 내릴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는 강제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와 제조사를 다른 규제로 압박해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같은 정치권의 질타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국회와 정부가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휴대폰 가격을 올리는 법을 스스로 만들고 나서는, 뒤늦게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엇나가고 있는 단통법 개정 등 즉각 대응보다는 현행 법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올리고, 단말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7일 오전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 경영진을 긴급 불러들여 간담회를 갖을 예정인데, 이같은 협박 아닌 협박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정부가 누누히 얘기했던 ‘가계 통신비 인하’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단통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정확히 짚어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16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단통법으로 소비자간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사게 됐고, 이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논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쟁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다. 단통법 입법자들이 시장경쟁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안은 단통법 폐지 또는 이통사 간 요금경쟁 촉진”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 반감을 없애고, 산업계도 살리는 해결방안은 ‘경쟁’ 요소를 단통법 개정으로 넣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단통법이 국민이 아니라 통신사 마케팅비 절감을 위한 법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통사 간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부음

▲권오용 前 충남대 생물학과 명예교수 별세, 권무식 WNF 대표이사 부친상=16일4시 경희의료원, 발인 18일6시, (02)958-9552
▲권태교 별세, 성원용 前 GS건설 상무이사·성무용 대구은행 부행장·성판용 티에스케이워터 상무이사 모친상, 김수웅 前 SBS 대표이사·조완석 前 대한중석 연구실장 장모상=15일 21시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17일 8시30분, (053)956-4445
▲김순조 별세, 박해봉 법무법인 창공 대표변호사·박해진 법무법인 창공 특허사무장·박해정 사업·박해숙 모친상=15일10시50분 경북대병원, 발인 17일7시, (053)200-6149
▲박영우 별세, 박수경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교수 부친상=16일15시40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발인 18일9시, (032)290-3513
▲박행복 영락교회 은퇴집사 별세, 장이금 남편상, 박상률 유니버스 이사·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박인이 월간산 교열담당·박미선 前 조달청 국제협력과 주무관 부친상, 박동우 중앙대 교수·서봉학 세무사 장인상=16일 8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9시, (02)3410-6915
▲심상선 별세, 심용식 덕운서예학원 원장·심용훈 안동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부친상, 이상진 포스코 캠퍼스 부장·이재혁 이재

혁복싱체육관 관장 장인상=16일5시 안동병원, 발인 18일7시, (054)840-0009
▲윤성진 별세, 윤상덕 사업·윤상선 동아일보 편집국 뉴스디자인팀 차장·윤경숙·윤재숙·윤현숙 부친상=16일6시 청주의료원, 발인 18일7시, (043)279-0151
▲이공숙 별세, 이재우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이상훈 회사원 부친상, 정철민 대한치과협회 감사·박기호 월계고 교사·남승호 삼성디스플레이 부장 장인상=16일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7시, (02)2227-7580
▲이광홍 前 이산부인과의원 원장 별세, 박영애 남편상, 이웅철 경희한의원 원장·이은경 내과 의사·이혜경 소아과 원장 부친상, 임대순 前 연세대 의대 교수·조종태 단국대 의대 교수 장인상, 전민영 시부상=16일8시5분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6시, (02)2019-4002
▲임규분 별세, 김용배 팬커뮤니케이션코리아 대표·김세정 모친상, 황보윤 동부화재상무 장모상=16일14시54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6시, (02)3010-2000
▲조정출 별세, 윤진현 前 K2 군무원·윤태현 농업·윤재현 前 K2 군무원·윤후현 사업·윤준현 칠곡군청 기획감사실장·윤성현 안양사 대표·윤영옥 모친상, 이은우 장모상=16일8시27분 칠곡경북대병원, 발인 18일7시30분, (053)200-2501

朝鮮日報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A31면 사람들

인사

▲국민일보▷편집국장 박현동▷사업국장 김용백▷논설위원 김명호